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19. 12.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연구모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방 한 일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



충청남도는 전통적인 농업도이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농업소득 양극화 심화 등 더 이상 농사일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안정적·균형적 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충남 농정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어민이 개방농정의 희생자가 아닌, 우리 사회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농민수당제 도입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연구모임 회원과 함께 수차례 회의, 토론회, 기본소득 박람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농어민수당제 도입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충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의 해법을 찾아 온 결과, 본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안된 내용이 농어민수당 지원조례의 성공적인 제정까지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연구모임을 위해 함께 모여 많은 성원과 말씀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연구모임 회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 한 일

회원명단

농민수당제 연구모임(15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이선영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회 원	추 욱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연구모임 등록	1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3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4
3.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5
제2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	11
1. 연구모임 발족	13
2.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31
3. 현장 방문	93
4.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107
5.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129
제3장 충청남도 농민수당제 도입 연구	153

I. 연구모임 등록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3.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①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연구모임명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2. 대표자 : 방한일 의원
3. 연구목적 : 최근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이해하고 향후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4. 구성원 : 14명

구분	성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대표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원	김득응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	김영수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박병희	충청남도 농정국장		
"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9년 1월 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방한일 (인)

충청남도의회의회장 귀하

2 이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자		방한일 의원
연구내용	과제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
	목적	최근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충남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연구활동기간		2019. 1 ~ 2019. 11 (11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연구활동비	소요액	5,000천원
	산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1 월 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방한일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3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사업계획**

2019. 1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사업계획

-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에 관한 이해 및 논의의 장 마련
- ◆ 충남형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에 관해 관련 전문가, 농업인, 국회의원 등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도출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남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정책 관련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1월 (11개월)
- 사업내용
 -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기관방문 등
 - 연구보고서 발간, 배포
- 사업비 : 5,000천원

2 세부사업 계획

[1] 연구·조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학습, 토론, 사례조사 등을 위한 연구 활동
- 사업내용
 - 연구모임 구성 및 정기모임
 - 연구·조사 비용 지원 등

- 사 업 비 : 5,000천원
- 회의비, 사례조사비 등

[2] 워크숍 · 간담회 개최

- 사업개요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 사업내용
-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
- 정기적 워크숍, 간담회 개최(기간 중 3회)
- 사 업 비 : 3,000천원
- 발제자, 참석수당, 인쇄비, 교통비 등

[3] 관련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농민수당 도입 지역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현장방문 및 상호 의견교환(기간 중 1회)
(현장방문 교통비, 식비, 토론회 비용)
- 사 업 비 : 1,000천원

[4] 보고서 발간 · 배포

- 사업개요 : 정책제언집 발간 및 배포
- 사업내용 : 활동결과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사 업 비 : 1,000천원
- 보고서 발간 및 배포비

3 |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19년 1월 중)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1차 정기모임 (2019년 2월 중)
 - 연구회 활동 방향 및 계획 논의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2차 정기모임 (2019년 3월 중)
 - “기본소득 및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이해”에 관한 학습회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3차 정기모임 (2019년 5월 중)
 - “농민수당제 추진 현황 및 쟁점”에 관한 토론회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4차 정기모임 (2019년 7월 중)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 농민수당 관련 정책 탐방(2019년 9월 중)
- 조사·연구 실시(2019년 9월~10월 중)
 - 영역별 조사연구(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제안 등)
- 보고서 발간, 배포(2018년 11월 중)
 - 연구모임 활동결과, 정책발굴 및 제언 등

4 | 기대효과

-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해도 제고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5,000	
워크숍 및 간담회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및 간담회 - 1,000,000 × 3회 = 3,000,000원 (회당 발제 2명, 토론 2명, 자료집, 식비 등)
현장 방문 및 토론회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 및 토론회 - 1,000,000원 × 1회 = 1,000,000원
보고서 및 정산서 인쇄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발간 - 15,000원 × 60부 = 900,000원 ○ 연구모임 정산서 발간 - 5,000원 × 20부 = 100,000원

II.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연구모임 발족

2.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3. 현장 방문

4.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5.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1. 연구모임 발족

① 연구모임 발족 회의자료

2019. 3. 19(화)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제1차 회의자료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제1차 회의

I 개최 개요

- 회의목적 : 농민수당제 개념과 현황 및 연구모임 일정 논의 등
- 일 시 : 2019. 3. 19.(화) 13:30 ~ 15:00
- 장 소 : 충남도의회 1층 소회의실(112호)
- 토론내용 : 농민수당제 현황과 사례소개, 토론 및 연구모임
일정 논의 등

II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담 당
13:30~13:35	5분	개회(진행안내 및 회원 소개)	사회자
13:35~13:40	5분	인사말씀	방한일 의원
13:40~14:10	30분	농민수당제 현황과 사례 소개	박경철 간사 (충남연구원)
14:10~14:55	45분	[토론 및 질의답변] ① 농민수당제 관련토론 및 질의답변 ② 연구모임 일정 논의 등	방한일 의원
14:55~15:00	5분	총평 및 마무리	사회자

III 연구모임 회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박병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사업 계획

-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에 관한 이해 및 논의의 장 마련
- ◆ 충남형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에 관해 관련 전문가, 농업인, 의회 의원 등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대안 도출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남형 농민수당제(농민기본소득)’ 정책 관련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1월 (11개월)
- 사업내용
 -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기관방문 등
 - 연구보고서 발간, 배포
- 사업비 : 5,000천원

2 세부사업 계획

[1] 연구·조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학습, 토론, 사례조사 등을 위한 연구 활동
- 사업내용
 - 연구모임 구성 및 정기모임
 - 연구·조사 비용 지원 등

- 사 업 비 : 5,000천원
 - 회의비, 사례조사비 등

[2] 워크숍, 간담회 개최

- 사업개요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 사업내용
 -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
 - 정기적 워크숍, 간담회 개최(기간 중 3회)
- 사 업 비 : 3,000천원
 - 발제자, 참석수당, 인쇄비, 교통비 등

[3] 관련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농민수당 도입 지역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현장방문 및 상호 의견교환(기간 중 1회)
(현장방문 교통비, 식비, 토론회 비용)
- 사 업 비 : 1,000천원

[4] 보고서 발간 . 배포

- 사업개요 : 정책제언집 발간 및 배포
- 사업내용 : 활동결과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사 업 비 : 1,000천원
 - 보고서 발간 및 배포비

3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19년 1월 중)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1차 정기모임(2월 중)
 - 연구회 활동 방향 및 계획 논의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2차 정기모임(3월 중)
 - “기본소득 및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이해”에 관한 학습회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3차 정기모임(5월 중)
 - “농민수당제 추진 현황 및 쟁점”에 관한 토론회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4차 정기모임(7월 중)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 농민수당 관련 정책 탐방(9월 중)
- 조사·연구 실시(9월~10월 중)
 - 영역별 조사연구(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제안 등)
- 보고서 발간, 배포(11월 중)
 - 연구모임 활동결과, 정책발굴 및 제언 등

4 기대효과

-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해도 제고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농민수당 추진 현황 및 사례 소개

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개념

- 개념 : 모든 농민에게 경지 면적, 농산물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제도
- 원칙 :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 근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유지

2.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추진 현황



출처 : 한국농정신문(2018.2.15)

○ 기초지자체

- 전남 : 강진, 해남, 장흥, 순천, 무안, 함평, 화순, 나주, 담양, 영광, 장성
- 전북 : 고창, 정읍,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완주, 진안
- 경남 : 산청, 의령, 양산, 거창, 함안

- 강원 : 춘천, 양구, 홍천
- 경기 : 여주, 양평, 이천
- 경북 : 봉화, 안동, 청송
- 충남 : 부여, 천안, 청양
- * 굵은 색 : 농민수당이 도입됐거나 거의 확정된 지자체

○ 광역지자체

- 전남도 : 2020년부터 농민 포함 취약계층에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중
- 전북도 : 2020년부터 농민수당 실시를 위해 준비 중
- 충청도 : 농민수당 개념의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방안 논의 중
- 충북도 : 농민수당 개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중
- 경기도 :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현재 논의 중
- 경남도 : 현 도지사 지방선거 당시 농민수당 도입 긍정 검토 약속
- 경북도 : 농민단체(전농), 정당(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논의 중
- 제주도 :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중

3. 농민수당 논의의 쟁점

- 개념 : 농민수당, 농가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 지급 범위 및 단가
- 충청도 농업환경실천사업과의 연계
- 농림부의 공익형 농업직불제와의 연계
- 시군-도-중앙정부 간 연계

4. 향후 토론회 논의 방향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 토론회 개최 : 개최일자, 발표자, 토론자 및 장소 등

2 제1차 연구모임 회의록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제1차 연구모임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 19.(화), 13:30 ~ 15: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 112호
- 참 석 : 13명(도의원6, 집행부1, 전문가7)
- 회의안건
 - 농민수당제 전국 현황과 사례 소개
 - 향후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 인식
 - 연구모임 운영 방향 논의

2 회의내용

□ 인사말씀

〈방한일 대표〉

- 고령화, 인구감소로 현재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UR), FTA 등 개방농정을 맞이한 충남농촌에 맞는 농민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 얼마 전,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의 5번째로 농업을 언급하시고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음

-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에 도의회 차원의 논의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출발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한만큼 본 연구모임 출범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며 향후 조례제정까지의 계획에 있음.

□ 주제 발표

〈박경철 간사〉

- 간단히 연구모임의 계획을 말하자면,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회의 후 관련된 현황을 보기 위한 탐방, 현장방문, 워크숍 등을 계획 중에 있음.
- 농업농촌의 가치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신규제도에 관해 관련전문가, 농업인, 도의원 등과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려는 것
- 농민수당의 특징은 정기적, 가급적으로 현금을 주며, 무조건성을 갖음. 현재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출범했으며 내년부터 전북도에서 월10만원 공익수당을 지급 예정에 있음
-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였고, 각 광역지자체 및 기초단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농민수당제를 도입 시도 중이다.
- 충청도에서 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 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농림식품부와의 공익형 농업직불제 사업과도 연계된 만큼 집행부와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

□ 자유 토론

〈박지홍 식량원예과장〉

- 현재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디서부터 손써야할지 고민이며, 농민에 대해 소득을 보전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통해 농민에 대한 사업 진행 중. 과거 3농혁신포럼 시,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농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시지역 사람도 동의하는 부분

〈배연근 회원〉

- 충남의 농가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갈수록 적자경영 농가 수도 증가가 소득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현재의 악순환 상태는 결국 농민수당제 도입의 타당한 이유가 되며 농민수당제를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논의하는 ‘장’ 필요

〈박경철 간사〉

- 타시도 사례를 보고 충남형 농민수당제를 위해 노력이 요망됨.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등 우선 개념정리부터 필요하며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여부, 수범의 범위 등 논의 필요하다.
- 4월에 수원에서 열리는 기본소득박람회 참석을 통해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농민소득제를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것이 연구모임의 발전적 논의를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희봉 회장〉

- 농민수당제는 보편적 가치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획단계에서 사업추진명과 그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효과를 불러옴

- 염려하는 부분인, 발생 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둬으로써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
- 단속 활동을 위해 채용인원 도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김병혁 회원〉

-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 되어야 하며 현금, 현물, 또는 지역화폐 등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급 방안에 대한 고민도 수반 되어 함
- 문제해결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재 농촌이 지닌 여러 어려운 부분들을 농민수당제가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는 실마리가 될 것.

〈강마야 회원〉

- 당장의 제도 도입을 위한 성급한 추진보다 여유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학자마다, 현장마다 농민수당제 개념부터 혼란해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순위 및 단계를 정하고 진행 한다면 도입 이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
-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은 농민수당제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므로 사업 개념과 대상을 우선 확정된 후 진행했으면 좋겠음.

〈조광남 회원〉

- 예산지역 상황을 보면, 농협서 시행 중이고 연계된 사업으로 농민들과 많은 교류 및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충남형 농민수당제를 현장 농민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최적의 제도 마련을 위한 틀을 제시해야 한다.

〈김지숙 회원〉

- 농촌에 많은 여성농민이 있는데, 공동체 활동 시 여성이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을 행사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축소 현상이 발생
- 절대로 농민수당제도에 여성농민을 배제해선 안 되며, 이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다른 일도 하며 집안일까지 도맡는 분들이 많아 여성농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농민수당제 도입에 있어서 여성농민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있어서 관심이 필요 함

〈방한일 대표〉

- 우리나라의 눈부신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배제되고 피해 받은 계층이 농민이기에 농민수당제에 해당 되는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 임.
- 첫 모임에서 회원 간 쏟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농민수당제범위 등을 확정하고, 타지견학, 탐방 활동 등도 하면서 향후 차근차근 논의 할 계획이다.

참고 연구모임 발족 사진



□ 언론보도

대전투데이

정치 02면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 논의 시작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출범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의원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 및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등 6명과 농민회, 활동가,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농민수당제 현황 및 사례 소개' 발표가 진행되어 '농민수당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타 지역 농민수당제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농민수당제에 대한 회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 및 향후 연구모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은 전통적

인 농업 도(道)이지만, 우루과이라운드 등 개방농정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충남 농촌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현재 농민수당제 도입 및 논의 등의 물결 속에 본 연구모임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홍 과장은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인

현재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고민 중이며, 농민에 대해 어떻게 소득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김희봉 위원장은 "보편적 가치로 농민수당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사업추진 및 대상을 명확히 해야 무임승차 방지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오늘 열린 첫 회의에서 쏟아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앞으로 현장방문, 정책탐방 및 토론회 등을 거쳐 11월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201 X 131 mm

大田日報

정치 04면

농민수당제 도입 논의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농민수당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농업경제환경위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의원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조승만 의원 및 교육위 김영수 의원 등 6명과 농민회, 활동가,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은현탁 기자

51 X 91 mm

2.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①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회의자료

2019. 4. 11.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
「연구모임 토론회」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 「연구모임 토론회」

목 적

- 지역사회 내 농민수당제 제도 수립 관련 공감대 형성
- 추진 중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

I 개요

- 일 시 : 2019. 4. 11.(목) 14:00 ~ 16: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 112호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 635-5360)
- 주 최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방한일 의원)
- 주 제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
- 참석예정 : 10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토론 참여자>

좌 장 ■ 방한일(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발제자 (2명)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지홍(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토론자 (4명) ■ 배연근(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 김희봉(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 강마야(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모임 간사)

※ 토론자 및 발제자는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II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		
14:00~14:05	5'	5'
	개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4:05~14:15	10'	
	대표 인사말	방한일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방한일 의원
14:15~14:35	20'	
	주제 발표 1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4:35~14:55	20'	
	주제 발표 2	박지홍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14:55~15:35	40'	
	지정토론	토론자 4명(각 10분)
15:35~15:55	2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참여자 전체
15:55~16:00	5'	
	폐회	방한일 의원

III 세부 진행계획

1 개회 : 14:00 ~ 14:05(05')

- 사회자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모임 간사)
- 국민의례 : 생략

2 대표 인사말 등 : 14:05 ~ 14:15(10')

-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 참석내빈 명단 사전파악 제공
- 연구모임 대표 인사말
 - ※ 개회식 후 토론자 지정 좌석 착석

3 주제 발표 1 : 14:15 ~ 14:35(20')

- 전국 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 현황과 충남도의 과제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4 주제 발표 2 : 14:35 ~ 14:55(20')

-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박지홍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5 지정 토론 : 14:55 ~ 15:35(40')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 충남형 농민수당제 수립 방향 및 제언
↓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충남형 농민수당제 수립 방향 및 제언
↓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 충남형 농민수당제 수립 방향 및 제언
↓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형 농민수당제 수립 방향 및 제언

6 자유 토론 : 15:35 ~ 15:55(20')

-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간 자유토론
 - 상호간 질의답변 방식
 - 질문자에게 마이크 제공

7 정리 및 폐회 : 15:55 ~ 16:00(5')

- 마무리 발언 후 폐회(좌장)

IV 연구모임 회원(14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용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박병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 토론회 발제자료 1

충남도의회 농민수당
연구모임 발표자료

전국 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 현황과 충남도의 과제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2019. 04. 11

발표 내용

1. 농민수당 논의 및 도입 현황
2. 농민수당란 무엇인가?
3. 농민수당은 왜 필요한가?
4. 농민수당의 구체적 사례는?
5. 어떻게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인가?
6. 충남도의 과제는?

1. 농민수당 논의 및 도입 현황



2017. 2. 6.
국회 의원회관실



지난 대선..



2018. 1. 23.
국회 의원회관실



2018. 5. 12.
국회 의원회관실

전농, 농민수당 쟁취할 ‘농민 후보’ 17인 발표
한국농정신문 2018. 06. 03

<p>지역구 전라북도지사 후보</p> 			
<p>지역구 전라남도의원 후보</p> 	<p>지역구 전라남도의원 후보</p> 	<p>지역구 전라남도의원 후보</p> 	<p>지역구 전라남도의원 후보</p> 
<p>지역구 전라북도의원 후보</p> 	<p>지역구 경상남도의원 후보</p> 	<p>신용환 의성군수 후보</p> 	<p>신용환 홍천군의원 후보</p> 
<p>지역구 서천군의원 후보</p> 	<p>지역구 경신시의원 후보</p> 	<p>지역구 진주시의원 후보</p> 	<p>지역구 진주시의원 후보</p> 
<p>지역구 영암군의원 후보</p> 	<p>홍준호 정읍시의원 후보</p> 	<p>지역구 순천시의원 후보</p> 	<p>지역구 공산구의원 후보</p> 



2018. 5. 12 국회 의원회관실

농민수당 월 5만원이 너무 소중한 이유는?

한겨레 2018-08-30

해남군,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전세 농가에 지급하는 것 '전국 최초'
농민들 "역수는 아쉽지만 궁극까지
인정해 농민수당 물고 싶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민수당추진단은 30일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도입을 환영한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제공)

"월 5만원이라도 물고들 터야지요"

전남 해남의 농민 정거섭(53)씨는 30일 내년부터 군이 농민수당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미미한 액수지만 농정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월 5만원은 이후 다른 지역에서 논의할 때 하한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다수 농가 공평하게 지원"... '농민수당' 도입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15일) 서울에서 열린 '2019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에 참석해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이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 "농민수당, 2020년 반드시 도입할 것"

김영록 충남도지사가 17일(15일) 서울에서 열린 '2019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에 참석해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청 및 교육청에 관한 결의안을 진행했다. 이날 결의안을 중재한 7명의 도의원 가운데 영미당 소속 이보라의 의원명만 빠져 농민수당을 빼고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수당제 논의 및 실행 현황_2019.03

<기초 지자체> (*빨간색: 확정 지자체)

- 강원 : 춘천, 양구, 홍천, 정선
- 경기 : **여주**, 양평, 이천, 평택
- 경남 : 산청, 의령, 양산, 거창, 함안
- 경북 : **봉화**, **상주**, 안동, 청송
- 전남 : **강진**, **해남**, **장흥**, **순천**, **무안**, **함평**, **화순**, **광양**, 나주, 담양, 영광, 장성
- 전북 : **고창**, 정읍,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완주, 진안
- 충남 : **부여**, 천안, 예산, 당진, 공주, 청양
- 충북 : 옥천

농민수당제 논의 및 실행 현황_20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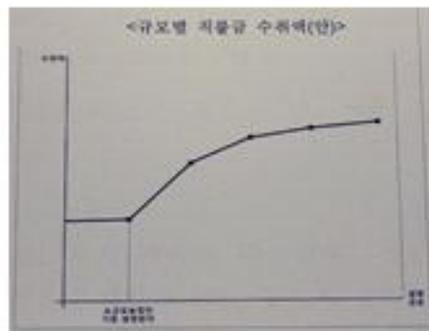
<광역 지자체>

- 강원도 : 2020년부터 소농·고령농업인(65세) 우선 농민수당 도입 준비 중
- 경기도 :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현재 논의 중
- 경남도 : 현 도지사 지방선거 당시 농민수당 도입 긍정 검토 약속
- 경북도 : 농민단체(전농), 정당(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논의 중
- 전남도 : 2020년부터 농민 포함 취약계층에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중
- 전북도 : 2020년부터 농민수당 실시를 위해 준비 중
- 충남도 : 농민수당 개념의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및 개편 방안 논의 중
- 충북도 : 농민수당 개념의 농민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위한 제도 마련 중
- 제주도 : 농민회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 논의 중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민수당 개념의 공익형 농업직불제로 개편 중

- 일정 경지 면적 이하 균일 지불: 기본직불
- 논밭 구분 없음
-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강화



2. 농민수당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의 개념 및 이념

• 기본소득제란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득, 직업 여부에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기본소득 > 참여소득(농민 등 특정계층 한정)

•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실행, 실험 및 계획 사례: 주로 제한된 지역과 계층 대상

- 국외: 미국 알래스카주, 나미비아, 브라질(기본소득법 통과), 스위스(국민투표 부결),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 프랑스 등등
- 국내: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인기초노령연금, 성남시 시민배당(1800억 원)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제기

- 김은표.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2016.4.8)
- 최한수.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2017.12)
- 김용렬 등. 기본소득이 농업 부문에 주는 시사점. 농경연(2018.9)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란?

모든 농민에게 영농규모,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성격

1. 취약계층인 농민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측면
 - 공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청년, 아동, 농민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민수당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약 2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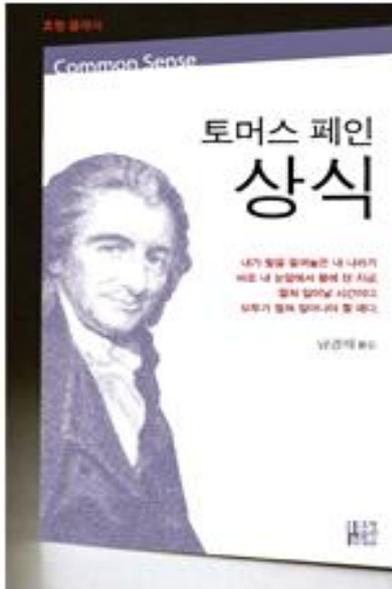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성격

1. 취약계층인 농민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측면
 - 공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청년, 아동, 농민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민수당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약 24조원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원인, 원리, 원칙

1. 농민수당의 원인
 - 사회양극화, 불평등, 지속불가능
2. 농민수당의 원리
 -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
3. 농민수당의 원칙
 -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이론적 기초: 토마스 페인의 토지배당



■ 이력과 저서

- 1737년 영국 잉글랜드 퀘이커교도 가정에서 출생
- 13세 까지 수학 후 가난으로 코르셋상점 점원 등 여러 직업 전전하며 정치와 사회제도 모순 체득
- 177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상식_Common Sense>을 출판해 미국 독립의 당위성 주장
- 1771년 <인권_Rights of Men>을 출판해 영국 군주정의 모순 비판
- 1779년 기본소득의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 <토지분배의 정의_Agrarian Justice>를 출간
- 1807년 미국에서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빈곤과 고독 속에서 생애를 마감

■ 토마스 페인의 <기본소득의 필요성> 주장과 방법

시민배당 방법

연간 기금		566만 파운드
노인 40만 명에게 매년 1인당 10파운드씩 지급	400만 파운드	
21세 9만 명에게 1인당 15파운드씩 지급	135만 파운드	
		535만 파운드
잔액(비노인, 장애인)		31만 파운드

“이 계획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공화국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토지 재산 제도에 의해 자연적 상속권을 빼앗긴 수많은 계층에게 국가적 정의를 실천할 것이다.”

3. 농민수당은 왜 필요한가?

무분별한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민의 삶 파탄

- 농업시장 개방의 가속화: 대부분의 농업선진국과 FTA 체결
 - 현재까지 15건 54개국과의 FTA 체결
 - 1993년 UR, 2004년 한·칠레 FTA, 2008 한·미 FTA, 2015년 한·중 FTA 체결
- 농민인구 급감: 1,083만('80) → 250만('15)



막대한 재정 투입, 그러나 농촌 현실은 암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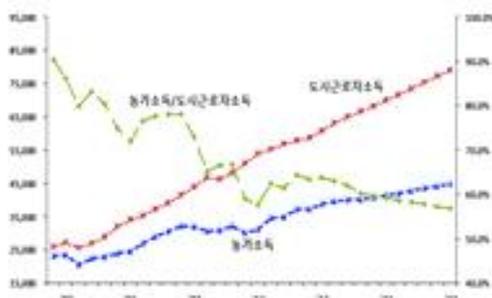
역대 정부별 주요 농업정책 내용 및 투융자 규모

시 대 별	정책기조	주 요 내 용	투융자 규모
노태우정부 (1988~1992)	농업구조 개선	구조조정 추진 선언 농업 규모화, 현대화	1992~2002 42조원
문민정부 (1993~1997)	농업근대화	중산위주의 농정에서 구조개선정책으로 전환 농업 규모화, 기계화, 현대화	1994~2004 57조원 (42조원+15조원 추가)
국민정부 (1998~2002)	중소농 보호	부채경감, 추곡수매가 인상, 농가재해보험, 직불제 등 농가경제 안정에 역점	1998~2002 45조원
참여정부 (2003~2007)	도, 농 균형발전	직불제 확대,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 등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복지 강화	2003~2013 119조원
이명박정부 (2008~2012)	농업 선진화	농어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여 부가가치 제고 등 돈버는 농업	별도 투융자계획 없음
박근혜정부 (2013~)	창조농업	농식품산업 창조경제, 6차산업,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등	별도 투융자계획 없음

농업 농촌의 핵심문제: 소득불평등

■ 농가소득의 상대적 하락 지속

- 전국: 2010년 32,121천원→2017년 38,239천원으로 19.0% 증가
- 충남: 2010년 33,220천원→2017년 36,040천원으로 8.4% 증가



■ 도농 간 소득격차 지속 확대

- 현재 63%→2027년 57% 예상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8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하락

- 전국: 2010년 3,062,956명→2017년 2,422,256명으로 20.9% 감소
- 충남: 2010년 394,324명→2017년 288,800명으로 26.7% 감소
- ∴ 전국 평균의 인구 감소

■ 농업인 고령화(65세 이상) 지속 증가

- 전국: 2010년 21.7%→2017년 42.5%로 20.8% 증가
- 충남: 2010년 22.1%→2017년 44.4%으로 22.3% 증가
- ∴ 전국에 비해 높은 고령화를 유지

비효율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농업직불금제도

■ 복잡한 체계로 행정비용 높음: 특히, 면적기준지불 문제 가중

목적	직불제명	도입시기	문제점
공익형	쌀 소득동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접지불금)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 수가 너무 많고 복잡 ➢ 세 가지 이상 수혜 어려움 ➢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 ➢ 불법 수혜자 상존 ➢ <u>토지면적 기준이라 대농에게 유리</u>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	2009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04년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005년	
소득 안정형	쌀소득동보전 직접지불제 (변동직접지불금)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수혜자 상존 ➢ <u>토지면적 기준이라 대농에게 유리</u>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2004년	
	밭농업 직접지불제	2012년	
구조개선 속진형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수혜자 상존 ➢ <u>토지면적 기준이라 대농에게 유리</u>
	FTA배업지원제 (수산 포함)	2004년	

▪ 농업직불금 수령액 양극화 심화(쌀직불금의 경우)

- ✓ 1ha 미만 농가(71.6%) 평균 직불금: 40만원
- ✓ 2ha 이상 농가(11.8%) 평균 직불금: 440만원
- ✓ 상위 12%(2ha) 대농 농업직불금의 약 50% 차지
 - 김현경 의원실(2018년 국정감사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2018.10.10)

▪ 대농이 영세농보다 11배의 직불금 수령

- 문제는 경지면적 기준에 따른 직불금 지불로 인해 농촌 내 양극화 추세는 점점 심화되고 공동체 해체는 가속화될 전망
- 전체 직불금의 82.6%가 쌀에 집중

▪ 농촌내 양극화 문제 심화

소득 5분위별 변화 추이(단위: 천원, 배)

구분	2005	2010	2015
1분위	7,348	6,310	6,864
2분위	16,565	16,040	18,059
3분위	25,401	24,775	27,811
4분위	37,596	37,582	43,047
5분위	73,366	78,086	99,413
5분위 배율	10.1	12.4	14.5
농가 평균	30,503	32,121	37,215

년(2016),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농식품부 농민육안식품 주요통계

▪ **턱없이 낮은 농업직불금: 선진국과 큰 차이**

- 유럽: 농업직불금이 곧 농민수당(기본소득)에 해당
- 우리나라: 농업직불금으로는 농민 생존 어려움(중소농가)

	우리나라	유럽
농업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약 10-20%	50-70%
농가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약 3%	약 30%

유럽의 평균 경지면적 30-50ha → **면적 자체가 농가기본소득**

우리나라의 평균 경지면적 1.5ha → **면적 자체 영세해 보장 불가**

유럽 → **소농직불제, 재분배 직불제 도입**

» 우리나라: **면적 기준 → 농가농민 기준 또는 별도 지급 필요**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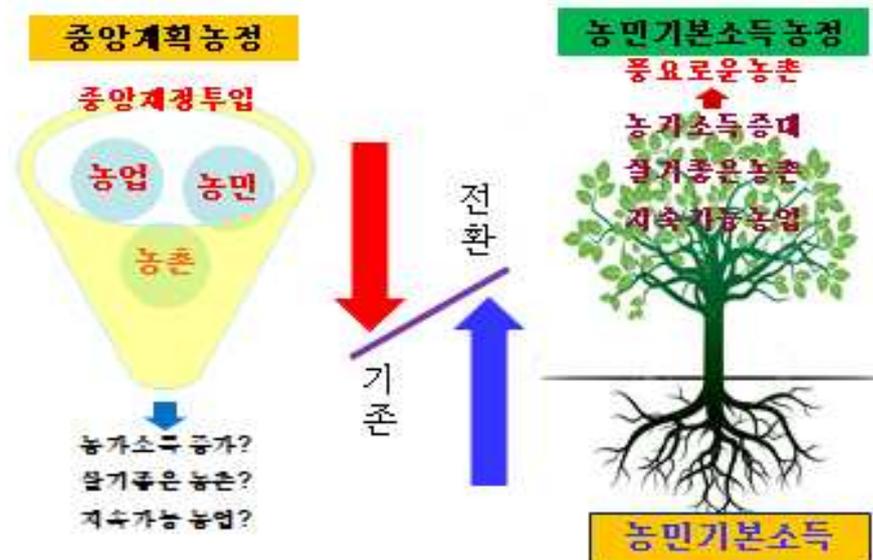
농촌 문화, 경관, 환경을 지키는 농민의 삶을 보장한다.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

- EU 71.7%(2016) 스위스 85.5%(2016), 일본 33%(2015), 우리나라 17%(2018추정)

지금의 농정개혁은
단순히 수정이나 개선이 아니라
농촌붕괴를 막을 특단의 정책 필요

그 유력한 대안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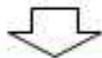


“농민수당은 사업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해 우리사회의
정의,공정,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혁명적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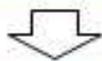
4. 농민수당의 구체적인 사례는?

사례 1. 인도 Madhya지역 농촌마을의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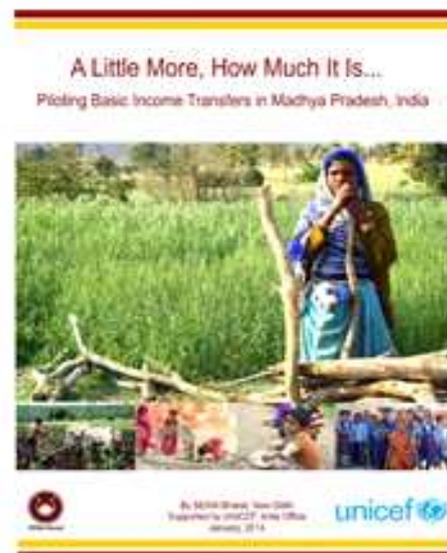
대상: 9개 마을
(대조군 12개마을)
기간: 18개월(2010-11년)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주택과 위생시설, 영양상태와
식습관, 건강과 의료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영향, 교육,
경제활동 등에서 긍정적 효과



사례 2. 충청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 기본직불+가산직불

목적: 공익형 농업직불제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

※ 대농 중심 편적 직불금에서 소농 중심
농가 직불금으로(2017년부터)

기존 지원: 맞춤형비료+벼 경영안정직불금

> 맞춤형비료: 188억원

> 벼 경영안정직불금: 287억원

개정 직불금제도:

> 드내 권역 농가는 벼 재배 여부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균등 지원해 소농 배려

직불금 규모:

> 드비료 시군비율 포함해 총 486억 원으로
농가당 지원 금액은 약 86만원 정도

이행 조건:

> 결소비료 적정시비 은동 comply

2017년: 485억원

- 138,683농가, 농가당 35만원

2018년: 522억원

- 141,762농가, 농가당 36.8만원

2019년: 667억원

- 148천농가, 농가당 38만원

- 벧값환원(3년 1회)

(ha당 30만원, 43천ha/130억원)

사례 2. 전남 강진군 방식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 (2008년부터)

매년 38억원을 5,000호의 벼 재배 농가에 지급
(농가당 최대 165만원을 상한)



논밭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 통해

50억원 추가 지원 (2018년부터)

약 7,100농가가 논밭 균등하게 경영안정자금 70만원 수혜(3ha 미만限)

- 70만원: 35만원은 지역화폐(강진사랑 상품권)+35만원은 통장입금

사례 3. 전남 해남군 방식

- ✓ **전체 농가 지원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인정 측면**
- 지원대상: 논·밭농업 이외 축산업, 임업까지 지원
- 지원기준: 해남군 내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실거주, 실경작)
- 지원규모: **제한없음(14,579농가)*** * '17년말 농관원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 지원단가: 월 5만원(연 60만원)
- 소요예산: 87.5억원(14,579농가* 60만원)
- 지원방법: 연 2회 지급 / 지역상품권으로 지원



해남군 '가칭' 농민수당 지원제도 주민설명회 (2018. 11. 8)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 제도 조례 제정(2018. 12. 21)

제18조(의무사항)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농민이어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정·지역농업경영체 등록
3. 농지·산지 훼손 금지
4. 국민의 안전행위거부 의무를 위반 친환경농업 직구 인증
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6. 도농근로자 농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농촌복지활동 금지
7. 영농체거주 스스로 지원
8. 빈자선 교육정책적 지원 사후관리 준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례 4. 충남 부여군 방식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 사업비에 추가 지원:
36만원+@(부여군 2019년 14만원 추가 지원) → 이후 확대
※ 향후 농가단위 지급에서 개별 농민단위 지급으로 전환



5. 어떻게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인가?

1. 농가단위 기본소득제

- 다수의 농업직불금 중 친환경농업직불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농가기본소득으로 통합
- 모든 농가에는 호당 월 50만원 지급
 - 전 국: 2017년 기준 농가수 104만가구 × 50만 × 12개월 = 6조 2400억원
 - 충남도: 2017년 기준 농가수 125,886가구 × 20만 × 12개월 = 약 3,021억원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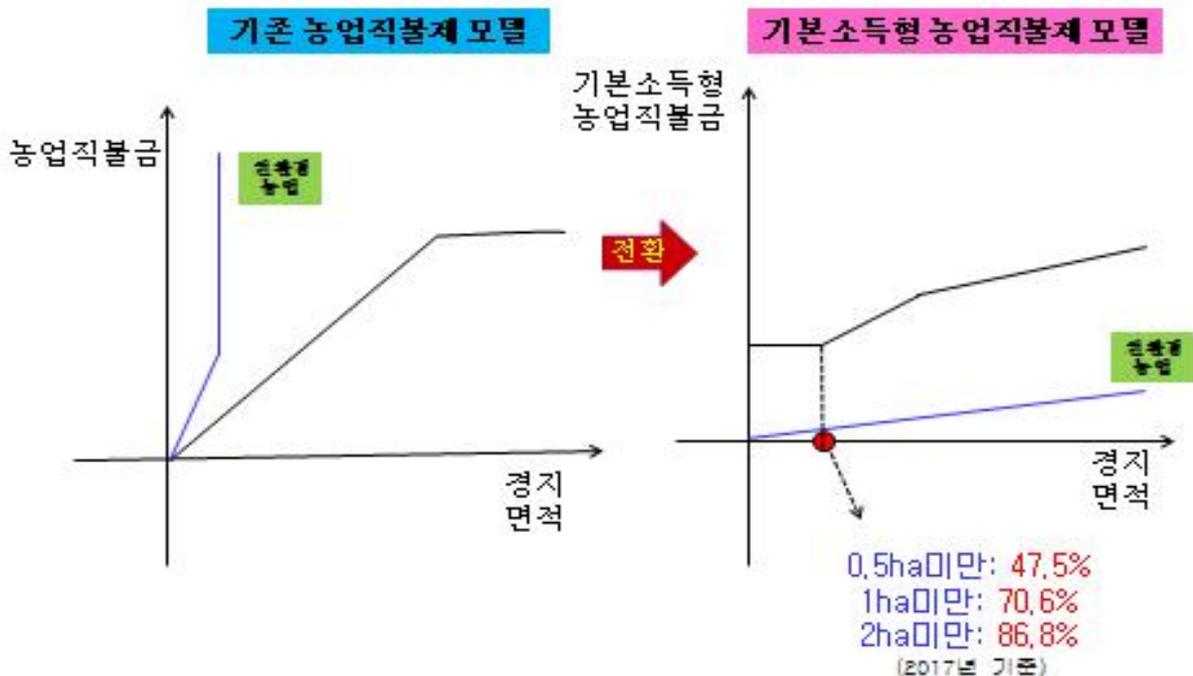
- ✓ IMF시기 농업직불제 최초 도입
- ✓ 우리나라 농업경제학자이자 전현직 관료로서 농가기본소득제 처음 제기



장점 및 단점

- ✓ 농가통계 활용 유리
- ✓ 실행상 편리(농가경영체등록)
- ✓ 그러나 세대 분리의 문제
- ✓ 인구 유입에 한계

▪ 농가단위 기본소득제의 전환 모델



재정 규모별 농업직불제 개편 효과

- 1.8조원일 때 0.5ha 미만 농가는 두 배 이상 증가
- 2ha 이상은 감소
- 3조원 이상 규모일 때 전 농가 혜택

구분	개편 전 (2015년)	재정규모별 환급 수량액					
		1.8조	1.9조	2.0조	2.1조	2.4조	3.0조
0.5ha 미만	농	45만	82만	82만	82만	82만	82만
	농·보	11만	75만	75만	75만	75만	75만
0.5~1ha	농	45만	82만	82만	82만	82만	82만
	농·보	11만	75만	75만	75만	75만	75만
1~2ha	농	102만	87만	87만	87만	87만	87만
	농·보	34만	53만	53만	53만	53만	53만
2~4ha	농	85만	75만	75만	75만	75만	75만
	농·보	35만	25만	25만	25만	25만	25만
4~30ha	농	25만	25만	25만	25만	25만	25만
	농·보	15만	15만	15만	15만	15만	15만

출처: 농민신문 2019.3.11

2. 개별 농민단위 기본소득제

연령	농가별구
0-4세	33,224
5-9세	40,865
10-14세	66,582
15세-19세	80,711
20세-24세	74,064
25세-29세	73,323
30세-34세	67,143
35세-39세	67,520
40세-44세	36,820
45세-49세	140,518
50세-54세	212,358
55세-59세	304,042
60세-64세	305,708
65세-69세	291,224
70세-74세	271,564
75세-79세	240,538
80세-84세	124,886
85세이상	56,941
계	2,180,000

- 정의: 농업 관련 법에 근거한 농업인
- 대상: 연령 설정 필요
 - 연령제한시(20~64세): ①번 모델
 - 연령무관시(20세 이상): ②번 모델

①번 모델
 $1,342,799 \text{명} \times 20 \text{만원} \times 12 \text{개월} = 3 \text{조} 2227 \text{억 원}$

②번 모델
 $2,330,000 \text{명} \times 20 \text{만원} \times 12 \text{개월} = 5 \text{조} 5592 \text{억 원}$

노인수당 별도
 기초노령연금 확대

* 충남도
 $288,800 \text{명} \times 10 \text{만원} \times 12 \text{개월} = \text{약 } 3,466 \text{억 원}$

개별 농민단위 기본소득제의 장점 및 단점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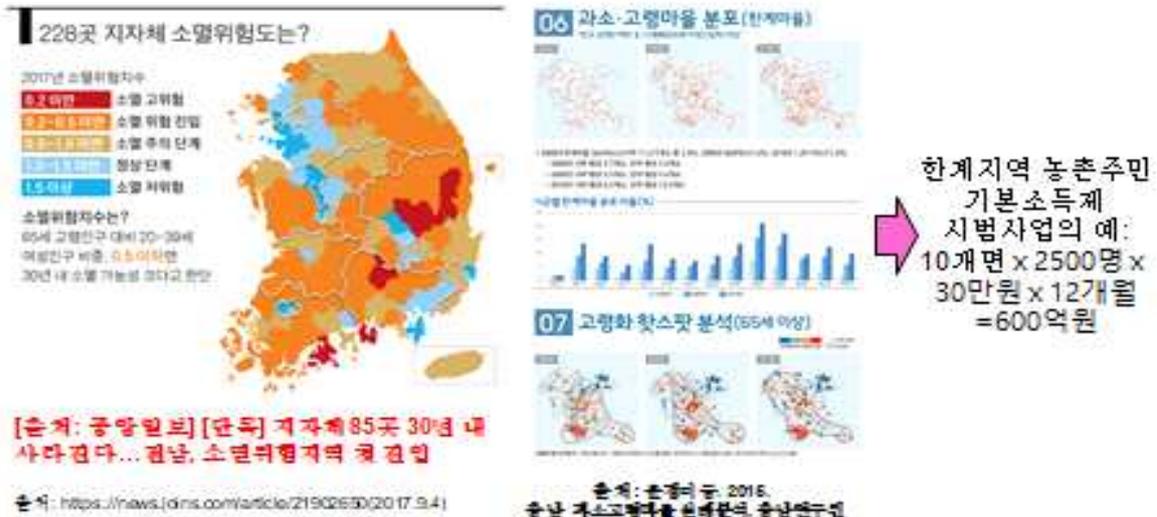
- 기본소득의원칙에 부합
- 여성농민의 권리 신장
- 인구 증가 유인
- 공동체 활동 활성화

단점

- 행정 비용의 증가
- 연령 설정의 어려움

3.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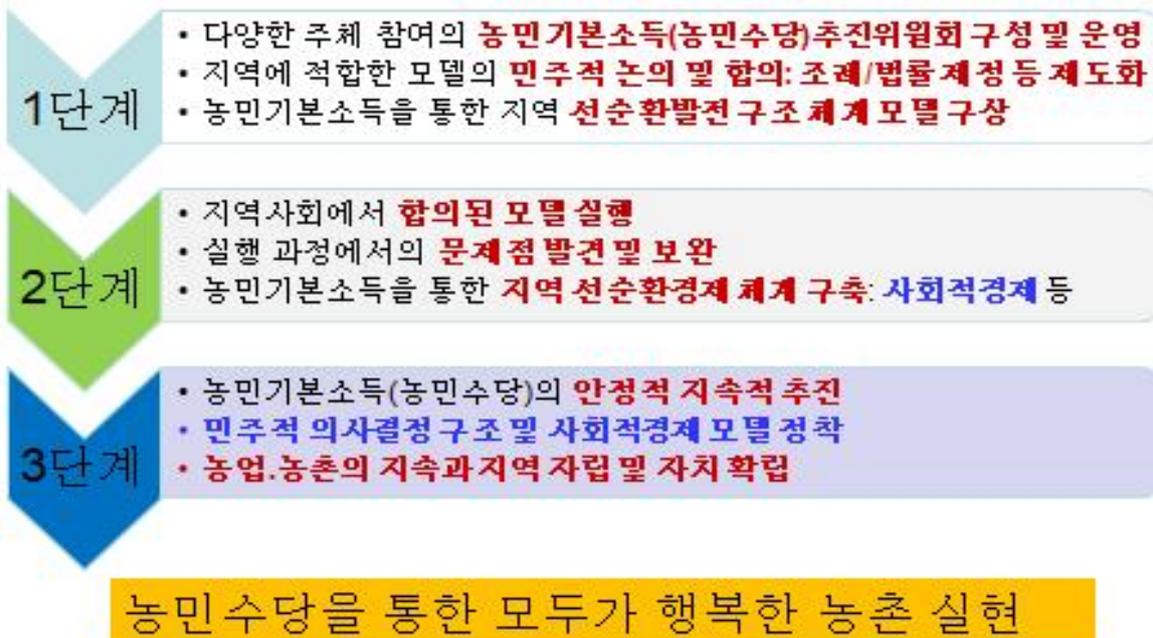
- 농가, 비농가 구분 없이 농촌거주민 대상으로 지급: 2. 권역구상과 4. 100%
- 우선, 한계(限界)지역(리, 면단위) 우선 실시
 - 한계지역: 과소고령화로 인해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 소멸위험에 있는 지역



실행 절차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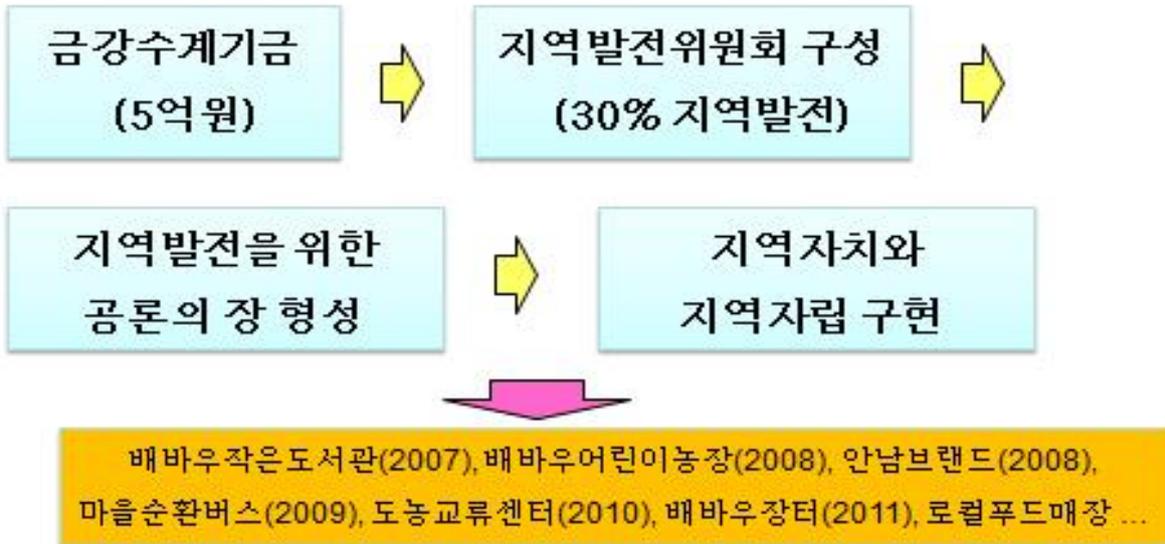


4. 실행 방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선순환 발전 실현



<사례> 충북 옥천군 안남면: 금강수계기금으로 주민자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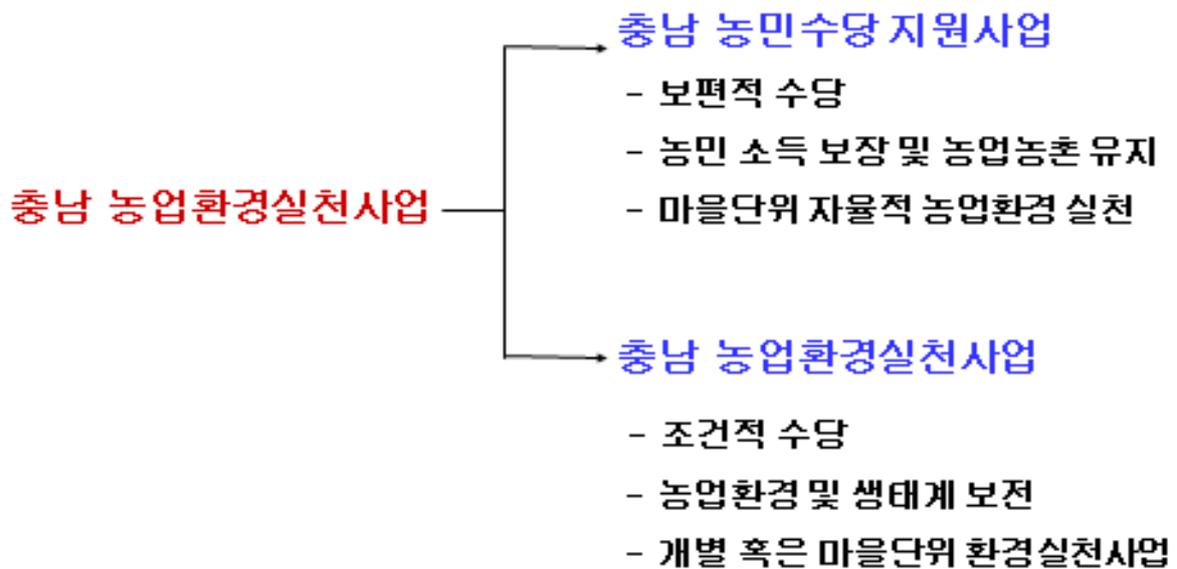
대청댐 상류 위치 안남면:
 매년 나오는 금강수계기금을 활용 주민자치와 자립 구현

**5. 농민기본소득제의 재원**

- ✓ **농업직불금의 재조정**
- ✓ **불필요한 사업성 예산 축소: 특히 각종 개발사업**
- ✓ **각종 행정비용절감**
- ✓ **농특세 확대 또는 균형발전세 등 신설**
- ✓ **무역이득공유제 등**
- ✓ **재산세와 부동산세: 공시지가 조정**
- ✓ **국토보유세: 토지공개념 도입 등**

6. 충남도의 과제는?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의 분리 추진



향후 과제

도청, 도의회, 농민단체 간 충남형 농민수당 모델 합의

- 충남농업환경실천사업 개편
-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예산 확대 계획
- 특히, 지급 대상(농가/농민), 지급액, 지급 방식(현금/상품권) 합의

충남도-각 시군 간 추진 체계 구축

- 도비와 시군비의 조정: 3:7 → 5:5
- 충남도, 각 시군 농민수당추진위원회 구축: 소비자, 소상공인 포함
- 농민 선별, 불법수혜 방지, 선순환경제체계 구축 방안 등

정부는 원래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많은 예산을 그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과 개발사업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

현재의 많은 농정사업과 농업직불금은 농촌 내
불평등과 불균형을 가속화해 중소농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농촌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농민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농민에게
직접 주면 농민이 원하는 농업과 그들이 살고 싶은
농촌을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다.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대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2 토론회 발제자료 2



2019. 4. 11.(목) 14:00
충남도의회 소회의실

농민수당제 정책 연구모임(2차)

농업환경실천사업 설명자료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 농업환경실천사업 추진배경

① 벼 재배농가 맞춤형비료 지원

- ▶ (지원기준) 「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 차원, 농가당 2ha까지 지원 (ha당 15포)
 - ※ '02~'11년 : 농가당 2ha까지 100%, 2~10ha 까지 50%지원
- ▶ (지원금액) 180천원/ha(농협중앙회 낙찰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 총사업비 198억원

- '10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토양특성 고려, 맞춤형비료를 정부주도 지원
 - (정부) 2013년 맞춤형비료 정부보조사업 일몰
 - (충남) 정부의 보조지원 폐지 이후에도 맞춤형비료지원 사업 추진('16년까지)
- ⇒ 과다시비에 따른 미질저하 그로인한 저가쌀값 문제 등 사업효과 미흡

②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 ▶ (지원기준) 도내 거주·도내소재 벼 재배농가 (농가당 5ha까지 현금지원)
 - ※ 「충청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제정('10.9.30)
- ▶ (지원금액) 231천원/ha (지원대상 124천 농가) * 총사업비 287억원

-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취지 적극적 이행을 위하여 경영비 보전차원 지원
- ⇒ 벼 재배면적 중심으로 소농가의 소득보전 미흡 등 불균형 초래

□ 농업환경실천사업 재원확보 및 지원방식

- ① 추가적 재원부담 없이 ② 소농배려 상생농정 ③ 농업 환경개선 효과

재원확보 경영안정직불금(287억원) + 맞춤형비료(198억원) 지원 사업비 활용(축소·일몰)

지원방식 도내 농촌거주 전체농가 대상 사업비 균등지원 (485억원)

⇒ 「대농중심 면적직불에서 소농위주 농가직불」로 전환 → 농업계 합의 도출

□ 사업효과

- 직불금의 균등지원에 따른 중소농 농가소득 보전기여
-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토양환경 개선 효과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화학비료 판매량(충남)	141천톤	129천톤	122천톤	'16년 대비 13.4%감소

□ 농업환경실천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42천호('18년 사업대상자+신규농가)
- 사업비 : 66,740백만원(도비15,660, 시군비36,540) * 도비 30%, 시군비 70%
- 실천사항 : 비료 적정시비, 벧짚환원운동(3년1주기) 자율실천
- 지원방법 : 마을별 협약사항 자율실천 후 농가별 지급

② 지원성과 및 문제점

① 지원성과 및 의의

- 전국 최초 농가단위 균등지원 정책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
- 화학비료 판매량 감소로 농업환경 개선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
 - '16년) 141 천톤 → '17년) 129(8.6%↓) → '18년) 122(4.8%↓)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가지급 근거 마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보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18.6.1)

구분	농가수	지급액(백만원)			호당 지급액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7	138,683	48,500	14,550	33,950	350
2018	141,762	52,168	15,651	36,518	368

②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비농가, 소규모(300평 미만)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심화 야기
- 대규모 농가 정책참여율 저조와 역차별 주장으로 사업효과 반감
- 서류상 세대분리 및 임대차 계약 등 부작용 초래, 통계관리 어려움
 - '17년 : 139천명, '18년 : 141천명(통계청 127천명, 경영체등록 186천명)

③ 그동안 추진상황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18.10)
-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검토에 따른 시군의견 조회('18.11)
-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방안 시군 농정과장 회의('18.12, '19.4)
-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방법 개선방안 지사님 방침('19.2.)
- 3농 정책포럼 '고령화시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개최('19.2)
- '19년 추경예산 심의결과 농업환경실천사업 증액(도비200억원, 전체667억원)

④ 향후 추진방향

[당초]

- 기본소득 보전 및 영세농가 우대지원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해소하고
- 농업환경 개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으로 당위성 확보 필요에 따라
- 농가기본소득 보상차원의 기본금 지원과 정책사업 병행 추진계획

① 기본지원금 인상 : '18년) 368천원 → '19년) 380천원(12천원 증)

② 벗짚환원 이행 추가지원 : 130억원(ha당 30만원 / 43천ha)

- 도내 벼 재배 전체면적(130천ha)을 대상으로 3년 1주기 벗짚환원

* 현금지원과 벗짚환원비 병행지원 지사님 방침결정(2019. 2. 13)

[변경안]

- 의회, 농민단체에서 농가소득 보전차원의 현금 균등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19년에는 현행대로 기본직불금을 확대 지원하고
- 기본지원금 인상 : '18년) 368천원 → '19년) 450천원(82천원 증)
- 별도로, 벗짚환원 우수마을 선정, 마을의 공익적 기능 지원 시책 추진
- '20년 벗짚환원 사업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3년1주기, 43천ha)
- 앞으로, 농식품부 직불금 개편에 따라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상호보완
하여 추진하되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원효과
를 극대화

농업직불제 개편안(농촌경제연구원)

- ▶ 다양한 공익창출(생태, 환경, 경관, 지역 등)의 가산형 지불확대
- ▶ 시장혁신 역량강화, 쌀, 밭직불제를 기본형 지불로 통합 추진
- ⇒ 개편 기본방향 설정('18년말), 세부 추진방안 마련('19년 상반기),
법률·시행령 개정 및 예산확보('19년), 시행('20년)

- 관련하여, 농민수당제에 대해서는 국가농업직불제 개편내용, 도의회
연구모임결과, 농업인단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참고 1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검토 시군의견 조회

□ 지원단가 인상(예산부담)

구 분	시군의견	비고
지원단가 인상 (368천원 → 450천원)	찬성(6시군), <u>반대(9시군)</u> (찬성) 아산, 서산, 논산, 서천, 청양, 홍성 (반대) 천안, 공주, 보령,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예산, 태안	(반대사유) 시군재정부담

□ 실천(협약과제) 사항 확대

구 분	시군의견	비고
실천과제 질소질비료 적정시비, 벼짚환원(3년1주기)	현행유지(5시군), <u>확대(10시군)</u> (유지) 공주, 논산, 서천, 홍성, 예산 (확대)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청양, 태안	공익적 기능 과제 확대

* 실천과제 예시 :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교육, 유기질비료 활용 등

□ 지원방법 확대

구 분	시군의견	비고
지원방법 (균등지원, 차등지원)	<u>균등지원(12시군)</u> , 차등지원(3시군) (균등지원)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차등지원) 보령, 청양, 태안	영농규모 관계없이 균등지원

□ 기타사항

시군의견	비고
① 시군부담 조정 : (현재)도비 30%, 시군비 70% → (개선)도비 40%, 시군비 60% ② 농업환경실천사업 시스템 강화 및 사업관리프로그램 필요 ③ 자율실천에 따른 부작용 → 환경개선 실천과제 이행점검 보완 ④ 직불금 지급시기 조정 등	

참고 2**「농민수당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 2019. 2. 8. ~ 2019. 2. 14(7일간)
- 대 상 : 1,591명[농업인1,139, 비농업인 452(읍면거주 365, 동거주87)]
- 내 용 : 10개문항(농민수당제 찬반, 찬반이유, 비농업인 지원 등)
- 방 법 : 읍면동사무소 내방객 면접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결과 [총괄]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1,591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시 검토되어야할 10개 기본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농가는) 농가소득보전(64%)을 위해 농민수당제 도입에 찬성(88%)하고, 해결과제로 재원마련(42%)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고
 - (비농가는) 타산업과의 형평성(69%)을 이유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반대(54%)하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촌(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가와 비농가 모두 반대(각각 71%, 76%)의견이 많았으며
 - 농민수당 지급시 “화학비료 절감” 과 같은 의무사항 부과는 농가와 비농가 모두 찬성(각각 73%, 75%)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종합적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시에는 재원마련 대책과 타산업과의 형평성, 비농업계의 이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결과활용

- 향후, 농가기본소득 보장제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문항별 설문결과

1. 농민수당제 **인지여부**에 대하여는?

→ 농가, 비농가 모두 “모른다”가 “안다”보다 높게 나타남

* 모른다 응답비율 : 농가 53%, 비농가 76%

2. 농민수당제 도입 **찬반여부**에 대하여는?

→ 농가는 “찬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농가는 “반대”가 높게 나타남.

* 찬성 응답비율 : 농가 88%, 비농가 54%

3. [찬성 응답자] 농민수당제 **찬성이유**는?

→ 농가와 비농가 모두 농업의 공익적 보상보다 “농가소득보전”이 높게 나타남

* 농가소득보전 응답 : 농가64%, 비농가63%

4. [반대 응답자] 농민수당제 **반대이유**는?

→ 농가와 비농가 모두 재원마련보다 “타산업과의 형평성”에 높게 응답함

* 타산업과의 형평성 응답비율 : 농가59%, 비농가69%

5.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연간 적정 지급액**은?

→ 농가는 “240만원”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비농가는 1/4수준인 “60만원”에 응답비율이 높았음(설문문항 : 연간 60, 120, 240만원)

* 연간지급액 응답 : 농가37%(240만원), 비농가41%(60만원)

6. 농민수당 지급 기본단위(농가, 개별농민)은?

→ 농가와 비농가 모두 “개별농민”보다 “농가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가단위 지급 응답 : 농가67%, 비농가72%

7. 농촌(읍면)거주 비농업인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 찬반의견은?

→ 농가와 비농가 모두 “반대”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농가 지급 반대 응답 : 농가71%, 비농가76%

8. 농민수당 지급시 의무부과 (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등) 의견은?

→ 농가와 비농가 모두 “찬성”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의무부과 찬성 응답 : 농가73%, 비농가75%

9. 농민수당제 도입시 해결과제로는?

→ 농가는 “재원마련”을, 비농가는 “타산업과 형평성”을 해결과제로 높게 응답함(설문문항 : 타산업과 형성평, 재원마련, 비농업계 이해)

* 해결과제 응답비율 : 농가42%(재원마련), 비농가44%(형평성)

10. 농민수당제 관련 주요 추가의견?

- ① 예산확보 및 이해관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진행
- ② 농업수당 지급시 농업보조금을 통일하여 농민수당으로 대체 검토
- ③ 은퇴농 위주의 수당 지급, 현 농업인은 가격안정제 실시
- ④ 농민수당보다는 친환경비료, 비닐, 거름 등 자재 보조로 전환
- ⑤ 농업인 중 고령농 비율이 높으므로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지급 등

붙임

가칭 “농민수당”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 2019. 2. 8. ~ 2019. 2. 14(7일간)
- 대 상 : 1,591명[농업인1,139, 비농업인 452(읍면거주 365, 동거주87)]
- 내 용 : 10개문항(농민수당제 찬반, 찬반이유, 비농업인 지원 등)
- 방 법 : 읍면동사무소 내방객 면접조사 및 방문조사

2. 응답현황 : 1,591명 (남 1,165명, 여 426명)

농가여부	농가 1,139명, 비농가 452명(읍면 365, 동지역 87)
거주지역	농촌지역 1,504명, 도시지역 87명
연령별	30세이하 87명, 30~40세 193명, 40~50세 284명, 50~60세 550명, 60세이상 447명

3. 설문결과 * “계” 란은 농가, 비농가의 설문자수가 달라 의미 없음

1) 농민수당제에 대하여 알고 있나(%/명)

구분	계	안다	모른다
농가	100(1,139명)	47(539명)	53(600명)
비농가	100(452명)	24(109명)	76(343명)
계	100(1,591명)	41(648명)	59(943명)

2) 농민수당제에 도입에 대한 찬반(%/명)

구분	계	찬성	반대
농가	100(1,139명)	88(998명)	12(141명)
비농가	100(452명)	46(206명)	54(246명)
계	100(1,591명)	76(1,204명)	24(387명)

3) 농민수당제에 도입을 찬성 이유?(%/명)

구 분	계	공약작기능보상	소득보전	다른의견
농 가	100(998명)	35(350명)	64(641명)	1(7명)
비 농 가	100(206명)	37(75명)	63(130명)	1(1명)
계	100(1,204명)	35(425명)	64(771명)	1(8명)

※ 다른의견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귀농정착, 한 번에 받고 싶어서

4) 농민수당제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명)

구 분	계	타산업과 형평성	재원마련	다른의견
농 가	100(141명)	59(83명)	39(55명)	2(3명)
비 농 가	100(246명)	69(169명)	29(71명)	2(6명)
계	100(387명)	65(252명)	33(126명)	2(9명)

※ 다른의견 : 내용을 잘 몰라서, 홍보부족, 재원낭비, 농업환경실천사업 등 지원사업이 너무 많음

5)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연간 적정 지급액은?(%/명)

구 분	계	60만원	120만원	240만원	기 타
농 가	100(1,139)	22(254명)	34(387)	37(417)	7(81)
비 농 가	100(452)	41(184명)	27(122)	15(70)	17(76)
계	100(1,591명)	27(438명)	32(509명)	31(487명)	10(157명)

※ 다른의견: (농촌지역) 10만원, 20, 100, 300, 360, 365, 600, 700, 1,000이상
(도시지역) 5만원, 10, 30, 50, 140, 1200

6) 농민수당 지급 기본단위(%/명)

구 분	계	농가	개별농민
농 가	100(1,139명)	67(759명)	33(380명)
비 농 가	100(452명)	72(324명)	28(128명)
계	100(1,591명)	68(1,083명)	32(508명)

7) 농촌거주 비농업인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의견(%/명)

구 분	계	찬성	반대
농 가	100(1,139명)	29(325명)	71(814명)
비 농 가	100(452명)	24(110명)	76(342명)
계	100(1,591명)	27(435명)	73(1,156명)

8) 농민수당 지급시 의무부과(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등) 의견(%/명)

구 분	계	찬성	반대
농 가	100(1,139명)	73(837명)	27(302명)
비 농 가	100(452명)	75(384명)	15(68명)
계	100(1,591명)	77(1,221명)	23(370명)

9) 농민수당 도입시 해결과제(%/명)

구 분	계	타산업과형평성	재원마련	비농업계 이해	다른의견
농 가	100(1,139명)	42(477명)	42(481명)	14(163명)	2(18명)
비 농 가	100(452명)	44(201명)	34(153명)	20(90명)	2(8명)
계	100(1,591명)	42(678명)	40(634명)	16(253명)	2(26명)

※ 다른의견 :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파약, 농업인 기준마련 지급

10) 농민수당과 관련된 추가의견

- ① 고령화 등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농민수당제도는 꼭 필요한 사항
- ② 농촌가구에 경제, 복지, 교육적인 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
- ③ 예산확보 및 이해관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진행
- ④ 사업추진 취지 목적 등 사전 비농업계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
- ⑤ 사업 전 충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개인 소득별로 비례하여 지원
- ⑥ 비농업인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⑦ 기초연금이나 복지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농촌거주자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타 산업 종사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⑧ 농민수당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의 국비 지원으로 사업
확대 및 안정적 사업추진 필요
- ⑨ 농업수당 지급시 타 농업보조금 배제 또는 농업보조금을 통일하여
농민수당으로 대체 검토
- ⑩ 직불금제도는 대규모 농가위주의 정책으로 빈익빈부익부만 조장하는
제도로써 소농들을 위해서라도 폐지
수당 의무이행시 '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처럼 검증 불가능한 기준 지양
은퇴농 위주의 수당 지급, 현 농업인은 가격안정제 실시
농민수당보다는 친환경비료, 비닐, 거름 등 자재 보조로 전환
농업인 중 고령농 비율이 높으므로 기초연금에 부가 지급으로 전환
농업도 경영이니 농업인 스스로 자생했으면 좋겠음

4. 결과활용

- 향후, “농민수당제” 도입검토 등 농가기본소득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참고 3 정부 직불제 개편방향

< 배경 >

- ▶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과잉생산 유발
- ▶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기능이 미흡,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 ▶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타작물 생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 역할의 한계

□ 농업기여지불제(기본형, 가산형) 추진방안

① 기본형 직불제

- 쌀고정직불과 밭고정직불의 격차 해소 → 논과 밭에 동일단가 지급(농지직불)
 - * 쌀고정 100만원/ha, 밭고정 50만원/ha → 2020년 60만원/ha(안)
- 영세규모 농가에 대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기초직불)
 - 규모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비례형 지불 도입
- 쌀 변동직불을 기본형 지불로 통합시 쌀 시장안정대책 별도 마련

② 가산형 직불제

-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직불금을 가산형지불제도로 통합
 - 공익적 기여 목적의 다양한 기여지불 프로그램 개발
 -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영농지속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지불제 도입

<농업 직불제 개편안 구조>



붙임

농업직불제 현황

구 분		지원(가입)대상	지급기준	근거법령	재원	도입	
국회지정사업 (연속)	쌀소득보전	고정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고, 형태기능유지 (유경지 포함)	진흥 : 1,076,416원/ha 박 : 807,312원/ha * 평균 100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농업인 제외 	국비 100%	2005
		변동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지 *개인30, 법인50, 들녘400ha 한도 ha당 63가마	수확기(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시 지급 (목표값(188천원)-수확기(10-1월) 평균값)×85%-고정직불금 -'16: 2,110,360원/ha -'17: 88,382원/ha(12,514원/80kg) -'18: 목표값 미정		국비 100%	2005
	조건불리역	'12.1.1 ~ '14.12.31기간중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 *개인4, 법인10ha 한도	진흥 : 702,938원/ha 박 : 527,204원/ha * 평균 55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국비 100%	2004	
	밭농업	고정	쌀직불 지급대상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50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 	국비 100%	2012
		논이모작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 경지율 22%이하 + 경지경사도 14%이상 + 농지면적 50%이상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농업환경	실천사업	협약(읍면-마을-농협) -질소질비료 적정시비 -뽕짚환원 등	'18년 368천원/ha - 농업환경개선 활동에 따른 직불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2018. 10.01.) 	도비30% 시군비70%	2017
	친환경	경업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 유기(5년), 무농약·저농약(3년) ※유기지속시(3년간추가)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 700천원/ha 500 350 밭 : 1,400 1,200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국비 100%	1999
	경관보전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지원 (메밀,유채,보리 등)	경관 170만원/ha 준경관 100만원/ha 활동비 15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국비 70% 지방비 30%	2005
	경영이양		은퇴고령농업인대상지급 (65~70세, 영농경력 10년이상)	매도 : 330만원/ha 임대 : 250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국비 100% (농어촌공사)	1997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협정일 이전부터 대상품목 생산한 농가 - 피해보전 : 당근, 노지/시설포도, 블루베리 - 폐업지원 : 블루베리 노지/시설포도,	피해보전: 5~351원/m ² 폐업지원: 3,314 ~ 8,741원/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금 100%	2014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2017중단)	도내 거주하면서 도내 소재농지에서 벼 재배하는 농지	231천원/ha (0.1~5ha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도비 30% 시군비70%	2011 2016	
친환경	축산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	(유기농가 21호, 유기, 신규 7호) : 30백만원 (무항생제 1,443호) :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법제3조(축산사업 발전강구) 	국비100%		

참고 4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안정적 식량공급
 - 나. 토양·물·공기·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 다. 농촌경관 유지
 - 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업·농촌 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보전·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사용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실천 사업
2. 농업생태 환경조성, 토양개량, 벼짚환원 등 농업환경 개선사업
3. 농촌의 경관유지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유지 보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사업이거나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농업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4389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토론회」 개최 결과

- ❖ 소득양극화 및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 및 제언하고자 마련된 토론회 결과 임.
⇒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반영에 반영되고자 함.

《 개 요 》

- 일시·장소: 2019. 4. 11.(목), 14:00~16:00 /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 참 석: 4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

I 총 평

- 양극화와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 및 제언하고자 마련된 연구모임 토론회로
 -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농민수당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충남 농촌의 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 및 청중이 참여하여 직접 현장에서 겪는 농촌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자세히 진단하였고,
 - 연구모임 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농촌 농민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정부의 사람중심 농정개혁 기조에 따라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효과적인 농업·농촌 지원책으로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 농민수당제 도입에 있어 준비되어야 할 기준, 재정문제 및 도민 공감대 구축 방안 등이 향후 과제로 도출되었음.
- ⇒ 토론회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공유하여 농민수당제 도입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II 주요 논의(요약)

1 인사말씀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

- 충남형 농민수당제 연구모임 출범과 함께 첫 회의에서 회원 모두 소중한 의견을 주었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연구모임 활성화에 불을 지펴주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의 청년이 떠나고 고령화 및 양극화된 위기의 농촌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농민수당제이며 농촌이 지닌 여러 홍수방지, 생태보존, 지역사회 전통 및 공동체 문화 계승 등 농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함.
- 농민수당제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즉 농민에 대한 정의문제가 있고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방법과 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급방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
- 작년에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섰다고 발표되었지만, 농민 소득은 낮은 상황에서 농민이 잘살아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음. 농민수당제가 농민 발전의 씨앗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과 협의를 통해 나아가도록 할 것.

2 주제발표

①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민수당의 최초 공론화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계속 논의가 진행되어 2017년 국회에서 정의당 주관으로 농민수당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음.
- 농민수당의 논의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하였으며 직업,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고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정부는 농민을 우대해야할 의무가 있음.

- 크게 농민수당의 5가지 원칙으로 모든 농민에게 주는 보편성, 농가가 아닌 개개인에게 주는 개별성, 지급의 조건을 달지 않거나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무조건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자유롭게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현금성 등의 원칙이 있음.
- 많은 국가재정을 농촌에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의 추이를 보이며, 충남은 도농 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2027년, 도시 대비 농촌 소득 수준은 50%대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선진국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크며 경관보존, 문화공동체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여 소농을 보호하는 직불제 정책으로 농업 농촌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있음.
- 농정예산의 절반이상은 직접 농민에게 줘야하며 정부는 농업 농촌이 지속 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기본적 소득보장 실현을 통해 농민 스스로 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 장이 되면서 바로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됨.

② 박지흥(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 도에서 농민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며, 도 차원의 사업을 농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하고자 했으나 사업 진행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현실임.
- 농민에 대한 정의의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고 각 사업 실행 시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파생됨.
- 현재 충남도의 예산 문제와 함께 시·군에서는 재정의 압박으로 인하여 무 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 하여 농민에게 이행하는 조건을 다는 것을 요구하였음.
- 농민단체에서 농가소득 보전차원의 현금 균등지원 요청에 따라 올해에는 현행대로 기본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로 마을의 공익적 지원을 추가 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농민수당제는 직불제 개편내용, 연구모임 결과 및 농민단체 의견 등을 중

합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함.

- 도에서 실시한 농민수당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농가는) 농민수당제 도입에 찬성하고, 해결과제로 재원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음
 - (비농가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농민수당제 반대비율이 더 높음
 - 농민수당 지급 시 2/3 정도가 농민에 대한 의무사항 부과하는 것을 요청함.

3 지평토론 (4인)

① 배연근(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 우리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투자 및 보호가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서 농민수당제가 어려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음.
-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정책을 말로 아닌 실천으로 이제는 보여줘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도에서 의견수렴 후 결단이 요구됨.
- 국가는 점차 현실화 될지도 모르는 인구감소를 넘어 더 가속화 될 경우 극단적으로 인구소멸에 대비를 해야만 하기에 농민수당제 도입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함.
- 여러 어려움에 처한 충남의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역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농정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모색 필요

② 김희봉(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당진시도 다양한 사회단체와 함께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추진 단계에서 농

민스스로가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수당제를 거부하는 농민도 있었음. 당당한 주체적인 정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농민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함.

- 사업 실행의 혜택을 받는 대상범위에 따라 법과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부서·서비스 전달체계가 달라지기에 먼저 정책대상의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해결해야할 숙제.
- 현재 전농에서 하고 있는 농민수당지원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에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모색해야 함.
- 농민수당제 도입으로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의 농업·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제도 도입이 있어야 함. 그 전에 일반 시민은 조세 저항이 높기에 종래에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 시·도민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관건이라 판단됨.

③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 현실적으로 농민수당제가 넘어야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며, 도입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실의 벽인 예산 문제가 해결 없이 원만한 도입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고 농가 경영체에서 여성이 계속해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은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므로 농민수당제의 도입에 있어서 소외받는 여성이 없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요구하면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은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상하는 것임.

④ 강미야(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농업환경실천사업에 대한 성격 규정과 정책 내용 등을 교통신리 하여 일부분은 기본형 수당으로 내용을 분리하여 '충남형 농민수당'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전환시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농민수당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정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수당을 받는 농민에 대한 홍보 활동 작업도 함께 고민해야 사업의 정당성이 부여됨과 동시에 장기적, 안정적 사업수행이 가능 함
- 제주도는 2015년부터 농지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충남도 실태 파악을 위해 과감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농민수당제 시행 전 튼튼한 기반을 마련 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또한 가능함
- 재원 마련은 사업 재편도 같이 가야 함.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재편과 도의 선심성 예산에 대한 일몰, 취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4 자유토론

- 직불금 지원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고 농가소득, 농민소득 등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하루빨리 농민수당제가 전면 도입되어 안타까운 우리 농촌의 공동화 현상과 각종 문제를 해결 하는 열쇠가 되기를 희망함.

[의견 :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소득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음. 농촌 붕괴를 막는 당위성 확보 및 사회적 배려 차원인지, 마땅히 농민이 받아야하는 권리인지 지금의 불분명한 상황을 걷어내고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단순히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권리를 당당히 받아야 하는 권리주장을 했으면 함

[질문 : 예산덕산농협 박용한 감사]

-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앞서 발표를 통해 직불금의 금액이 실제 농민이 아니라 농지 소유자에게 가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문제를 막는 있는 방안이나 평소 어떤 의견이 있는지?

[질문 : 청중 1]

-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이 없으니까, 농민회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농민인권 차원에서 이야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농업정책은 농민의 인권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 틀에 담기에는 시대와 환경 변화로 효율성이 저하 될 수밖에 없음.
- 농촌의 개방화 이후 급속히 농가소득이 줄어들었고, 농민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실정임. 각자도생 상황에 놓여있는 농민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필요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해야 함.
- 다른 기본소득과 다르게 농민수당이 논쟁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사회적 보상이 없는 상황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잘못.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하기에 농민소득을 도입의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는 상태.

[답변 :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 직불금 제도 개선 업무를 통해 아쉬운 점이, 학자나 전문가가 예로 드는 유럽 같은 농업 선진국이 많은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세농가의 구조이기에 유럽국가와 비교 시 정책이 원활히 도출되기 힘든 구조라서 단순한 비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음.
- 직불금 제도 등 현재 농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다 확보해야 향후 새로운 농촌을 위한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며 해마다 기준 등의 변경으로 정부직불금 기준대로 맞춰 사업시행을 하는 애로점이 있음.
- 정부에서 직불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임. 도에서 하는 것보다 규모가 5~10배 정도 소득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 됨. 영세 농가가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 실천 가능한 환경프로그램을 이행 및 점검하고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정책이 합의될 것임.

[답변 : 충청남도 박지흥 식량원예과장]

Ⅲ 토론회 결론

<과 제>

1.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과 농민수당제의 공존 또는 통합으로의 길 문제
2. 농민수당제 사업 대상자 선정의 의견 수렴 과정 및 합리적 기준 마련
3. 농민수당제 지출 재정 방안과 기존 사업 정리 방안
4.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등 사업의 효율성 높일 수 있는 타 시도 사례 참고
5. 농민수당제에 대한 비농민과 도민의 조세저항 등 설득 여부

⇒ **도출된 과제가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충청남도 농촌·농민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재인식하였고,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들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이며 정책 효율성 및 대상의 효능감이 높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및 의견들이 도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고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사진



□ 언론보도

충남투데이

2019년 04월 12일 02면 (종합)



충남형 농민수당 정책 도입 논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11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민에게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이 라는 구체적인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공주시청 배연근 푸드플랜 활동가,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

눴다. 방한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는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 및 농촌이 베푸는 여러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전국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현황과 충남도의 과제' 주제발표 자리에서 "계속되는 농촌 소멸현상은 과연 우리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충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은 '충남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농민단체 등에서 소득

보전 차원의 현금 균등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의 공익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 농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함께 향후 농민수당제의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예산덕산농협 조광남 이사는 "농민수당제의 취지는 매우 공감 하지만 현실의 벽인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주시푸드플랜 배연근 활동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정책을 말로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자인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내포/석지후 기자

(21.2*14.2)cm

충청신문

2019년 04월 12일 03면 (종합)

충남형 농민 수당제 도입에 '공감대'

도의회 정책 연구 모임서 논의... 직불금 확대 등 소득 보전 필요 강조

충남형 농민 수당제 정책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소회의실에서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형 농민 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에선 농민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서 농민 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타 지자체의 수당제 추진 현황을 소개하면서 "농촌 소멸 현상에 농촌이 지속될 수 있는지 불안감이 깊어진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도의 농업 환경 개선 실천 사업을 발표한 뒤 "농민 단체 등에서 소득 보전 차

원의 현금 균등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의 공익적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선 배연근 공주시푸드플랜 활동가는 "국가 개발 정책의 희생자인 농민을 위한 농민 수당제 도입을 위해 도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는 "농민

수당제의 취지는 매우 공감하지만 현실의 벽인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방한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 농촌이 베푸는 여러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민 수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 모임은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아 도의원들과 농민회, 농협 관계자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진용 기자 jjw8531@dailyycc.net

(22.6*8.3)cm

2019년 04월 12일
05면 (정치)

충청투데이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토론회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농민수당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한일**(예산1)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배연근 푸드플랜 활동가, 김희봉 당진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경철 충남연구원 재익연구원과 박지흥 도 식량원예과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방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는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 및 농촌이 베푸는 여러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계속되는 농촌 소멸현상은 과연 우리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지흥 과장은 “농민단체 등에서 소득 보전 차원의 현금 균등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의 공익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11.3*8.7)cm

3. 현장 방문

① 연구모임 현장방문 개최 계획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현장방문

I 방문개요

- 방문목적 :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의 공감대 형성 강화
- 방문내용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행사장 방문, 관람 및 컨퍼런스 참석으로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 모색
- 대 상 : 14명(도의원 6, 소관부서 1, 일반회원 7)
- 일 시 : 2019. 4. 30.(화) 10:30 ~ 20:00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 2019. 3. 준공(지하2층~지상5층 규모, 연면적 97,602㎡)

II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2:30	120분	충청남도의회 → 수원	의회 버스
12:30~13:30	60분	점심식사	
13:30~13:50	20분	식당 → 수원컨벤션센터	
13:50~15:00	70분	박람회 행사 및 전시부스 관람	
15:00~17:00	120분	국제컨퍼런스 참석 (Ⅲ세션 : 기본소득 확장과 재원)	발표자: 박경철 간사
17:00~19:00	120분	수원컨벤션센터 → 내포	
19:00~20:00	60분	저녁식사 (총평 및 마무리)	

III 방문지 소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 (기본소득 정책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 정책 논의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 아젠다 확산과 공감대 형성
- ◇ (지역화폐 홍보) 지역경제와 복지를 연계해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화폐 홍보를 통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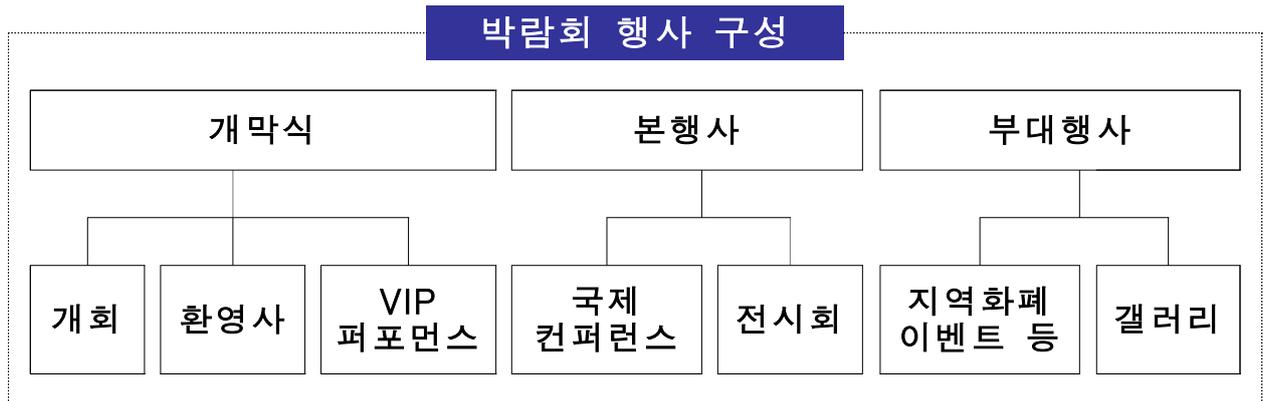
□ 개 요

- 행사명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행사주제 :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 기간/장소 : 2019. 4. 29 ~ 30. / 수원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경기도 /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참가대상 : 3,000여명(국내·외 석학·전문가 및 지자체 등)
* 기본소득네트워크, 지방정부협의회, 지역화폐 발행 및 발행예정 시·군 등

□ 행사내용

- (개막식) 개회사 및 환영사, VIP 퍼포먼스(커팅식&세레모니)
- (국제컨퍼런스) 국내·외 저명인사 강연 및 토론회 등
- (전시회) 전국 지역화폐 전시·홍보부스, 기본소득 정책부스* 운영

* 계층별 기본소득(청년, 노인, 농민, 임산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지역화폐 등



□ 행사장 구성(수원컨벤션센터)

구 분		규 모	내 용
3홀	국제컨퍼런스	1,700여석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 국내외 유명 석학이 말하는 기본소득,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사례 발표 등
2홀	전시 및 이벤트	100부스	기본소득, 지역화폐 관련 전시 체험 부스 및 국내외 지자체관
1홀	체험관	-	이벤트 및 경연대회, 즐길거리 등
로비	지역화폐	30부스 규모	지역화폐 관련 갤러리 및 상생관
열린광장	푸드 코트	센터 야외	추억의시장거리 조성, 먹을거리 및 푸드트럭 ZONE

IV 연구모임 회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용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박병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참고1 국제컨퍼런스 일정표

□ 4월 29일 (월)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등록	11:10 ~ 11:30	20' ■ 등록 및 행사 안내	등록 데스크	
오전	11:30 ~ 11:50	20' ■ 도지사 연설		
	11:50 ~ 12:10	20' ■ 기조연설 (Keynote Speech) I (비전에서 현실로: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 - 애니 밀러(BIEN 공동설립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30')		
	12:10 ~ 12:30	20' ■ 박람회 전시장 방문	도지사, VIP, 연사	
	12:30 ~ 14:00	90' ■ 오 찬		
오후	14:10 ~ 14:20	20' ■ 기조연설(Keynote Speech) II (혁신 주도 미래 변화상과 기본소득下の 따뜻한 세상) - 강남훈 (한신대 교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 장)(30')		
	14:20 ~ 14:30	10' Tea Break (휴식)		
	14:30 ~ 15:40	90'	■ 각국 실험 사례 발표 및 토론	
			■ 세션 I <좌장> •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발표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및 성남시의 청년배당 • 시그네 아우하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 핀란드 실험 <토론자> •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원) •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인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BIEN 부의장)	발표자 20분 토론자 10분
	15:40 ~ 16:00	20'	Tea Break (휴식)	
	16:00 ~ 17:30	90'	■ 세션 II <좌장> •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 <발표자> •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 인도 시킴 주 사례 • 요세프 마리아 콜 (바르셀로나, 선임연구원) : 스페인 사례 • 안드레아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 스위스 사례 레베카 파니안 (스위스 라이노시 기본소득 실험 책임자) <토론자> • 시그네 아우하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 샘 매닝 (Y Combinator 연구소, 연구위원)	발표자 20분 토론자 10분

□ 4월 30일 (화)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등록	09:30~ 10:00	30'	■ 등록 및 행사 안내		
오전	10:00~ 11:30	90'	< 개별세션 >		발표자 30분 토론자 10분
			Track I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	Track II (기본소득 일반 : 이론 및 최근 흐름)	
			■ I세션 (청년배당의 정책효과) <좌장> • 강남훈 (한신대 교수) <발표자> • 사정희 (군산대 교수) & 김교성(중앙대 교수) • 샘 매닝 (YC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 시그네 아우하아아넨 (IFIA 선임경제학자) •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 II세션(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부와 기본 소득) <좌장> • 유종성(가천대 교수) <발표자>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토론자> • 이항우 (충북대 교수) •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11:30~ 13:00	90'	■ 오 찬		
오후	13:00~ 14:30	90'	■ II세션(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좌장> • 이한주(경기연구원 원장) <발표자> •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 • 임진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사무관) <토론자> •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 •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II세션(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 소득) <좌장> •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발표자> • 알마즈 젤레케 (미국 뉴욕대 교수) •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토론자> •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발표자 30분 토론자 10분
	14:30 15:00	30'	Tea Break (휴식)		
	15:00~ 17:00	120'	■ III세션(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좌장> • 김교성 (중앙대 교수) <발표자> • 이원재 (Lab 2050 대표, 청년수당2.0) •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농민기본소득) • 광노완 (한신대 연구교수, 기본소득재원) <토론자> •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레베카 파니언 (스위스 라이노시 기본 소득 실험 책임자)	■ III세션(기본소득 : 법적, 사회적 가치) <좌장> • 오동석 (이주대 교수) <발표자> • 노호창 (호서대 교수) • 강현철(경기대 교수) & 유영성(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 <토론자>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 요셉 마리아 콜 박사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치와테대 교수)	발표자 30분 토론자 10분

참고2 기본소득박람회 행사 포스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가득한
전국 최대 지역화폐 전시 체험관 및 이벤트 운영

잠시 접어두었던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요!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권리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나와 내 가족, 우리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소 | 수원 컨벤션센터
기간 | 2019. 4. 29(월)~4. 30(화)

주최
충청남도
주관
GRI 정책연구소
GOS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충남연구원

2 연구모임 현장방문 결과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기본소득 박람회 현장방문 결과

1 방문 개요

- 일 시 : 2019. 4. 30.(화) 10:30 ~ 19:30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 주 제 :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의 공감대 형성 강화
- 참석인원 : 7명(회원5, 상임위 직원 2)

2 주요 내용

○ 기본소득박람회장 방문

- 최초로 개최되는 ‘기본소득박람회’는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국내외 주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하고자 함.
- 기본소득 주제 그림 전시, 기본소득 안내관, 지역화폐 홍보관, 지자체 상품판매관 등 다양한 부스와 체험 전시실 운영 으로 연구모임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음
- 기본소득박람회 사무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 계층별 사업 소개 등 알기 쉬운 설명으로 기본소득정책이라는 범위에 포함되는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회원 간 도모 하는 시간이었음.

○ 국제 컨퍼런스 참관

- ‘기본소득 확장과 재원’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 참관을 통해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며, 어떤 모습으로 설계 되어야 할지 등을 모색하는 자리
- 회의에 참석한 회원 및 일반 청중 모두 농민수당에 대해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연구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통해 종합적인 농민수당제의 도입 논의와 추진 방향 등의 비전을 설명하였음

3 종합 평가

- 선도적인 기본소득 관련 논의와 정책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향후 농민수당제 도입에 있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비교 검토하고 최대한의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농민수당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됨.

4 방문 사진





4 언론보도

충청매일

2019년 05월 01일
09면 (지역)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 정책 연구모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은 3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청년, 농민 등 여러 기본소득 정책 논의 및 국내외 주요 인사의 주제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 아젠다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 현장방문의 목적은 소득양극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민들을 위한 정책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회의 참관을 통해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공감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박람회 부대행사 및 기본소득주제 체험전시장 관람과 ‘기본소득 확장과 재원’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연구모임 간사인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 자리에서 “취약계층인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업 정책이 될 것”이라며 농민수당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차순우기자

(11.1*10.4)cm

충남투데이

2019년 05월 01일
02면 (종합)

도의회, 농민수당제 현장찾아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박람회 현장방문의 목적은 소득양극화와 고령화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민들을 위한 정책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회의 참관을 통해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공감대를 강화하는 위해 진행됐다. 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박람회 부대행사 및 ‘기본소득 확장과 재원’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내포/이지웅 기자

(14.0*4.2)cm

4.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①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계획

2019. 7. 29.(월)

-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
「연구모임 토론회」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 「연구모임 토론회」

목 적

- 추진 중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관련하여 각계 의견 수렴
-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 논의

I 개요

- 일 시 : 2019. 7. 29.(월) 14:00~16: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 635-5360)
- 주 최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방한일 의원)
- 주 제 :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
- 참석예정 : 10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토론 참여자>

좌 장 ▪ 방한일(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발제자 (2명)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용혁(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토론자 (4명) ▪ 김희봉(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 김지숙(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 박지홍(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 사회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모임 간사)

※ 토론자 및 발제자는 변경 될 수 있음

II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15	10'	대표 인사말
< 토 론 회 >		
		※ 진행 : 방한일 의원
14:15~14:35	20'	주제 발표 1
14:35~14:55	20'	주제 발표 2
14:55~15:35	40'	지정 토론
15:35~15:55	2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5:55~16:00	5'	정리 및 폐회

III 세부 진행계획

1 개회 : 14:00 ~ 14:05(05')

- 사회자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모임 간사)
- 국민의례

2 대표 인사말 등 : 14:05 ~ 14:15(10')

-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 참석내빈 명단 사전과약 제공
- 연구모임 대표 인사말
 - ※ 방한일 도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3 주제 발표 1 : 14:15 ~ 14:35(20')

-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
(박경철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4 주제 발표 2 : 14:35 ~ 14:55(20')

-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
(최용혁 / 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 ※ 주제 발표 이후 토론자 지정 좌석 착석

5 지정 토론 : 14:55 ~ 15:35(40')

김 희 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 광 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김 지 속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박 지 흥 (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6 자유 토론 : 15:35 ~ 15:55(20')

-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간 자유토론
 - 상호 질의답변 방식 진행
 - 질문자에게 마이크 제공

7 정리 및 폐회 : 15:55 ~ 16:00(5')

- 마무리 발언 후 폐회(좌장)

IV 협조 사항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팀

- 사진촬영 및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음향설비 지원

○ 충청남도(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 도민, 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 충청남도(인사과)

- 상시학습 시간인정(2시간)

V 연구모임 회원 명단(14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용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박병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결과

2019. 7.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2차 「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I. 총 평	1
II. 주요 논의	2
① 인사말씀	2
② 주제발표(2인)	2
③ 지정토론(3인)	3
④ 자유토론	4
III. 토론회 결론	6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2차 토론회 개최 결과

- ❖ 소득양극화 및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에 있어 각계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토론회 결과 임.
- ⇒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반영에 반영되고자 함.

《 개 요 》

- 일시·장소: 2019. 7. 29.(월), 14:00~16:00 /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 참 석: 7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

I 총 평

- 양극화와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 및 제언하고자 마련된 연구모임 토론회로
 -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양극화와 고령화로 어려운 충남 농촌 현실을 아는 전문가 및 청중이 참여하여 직접 현장에서 겪는 농촌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자세히 진단하였고,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민수당제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시행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타 시도,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선도적인 조례안 제정이 요구되었음.
- ⇒ 토론회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서 관련 부서, 기관 등과 공유하여 농민수당제 도입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II 주요 논의(요약)

1 인사말씀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

- 농업정책은 현장의 농민이 우선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농민수당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
- 스위스의 연방헌법 내 농업조항 신설, 독일의 '녹색계획' 등은 국가 직불금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부족한 농업소득 만큼 기본 생계비 지원을 통해 농촌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 농민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례 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 하고,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고 사업 효능이 뛰어나 타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가 탄생되도록 해야 함.
- 오늘날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임과 동시에 지방 소멸을 막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 수당제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필요

2 주제발표

①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민기본소득은 현실론과 원칙론이 있으며, 먼저 현실론은 시작은 미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단계적 발전이 필요. 원칙론은 시간이 걸려도 기본소득에 충실한 농민기본소득 실시가 바람직함.
- 농가단위로 기본소득 지급 시 농업경영체 분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기본소득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개별 농민단위로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 농민 수당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우선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 전남 강진군처럼 현금과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청년수당처럼 지역화폐를 체크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 가급적 권장되지는 않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음.

② 최용혁(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 충남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참여를 중시하며, 농민은 생태계의 보존과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 농민수당은 농민의 권리와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며, 농민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증진하고, 그동안 묻혀있던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 어려운 충남 농촌의 모습은 더 이상 기존 농촌 사업의 한계성을 보여줌. 모든 농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농가단위로 운영 집행되던 행정을 이제는 사람으로, 농민 개인별로 발전해야 하며 충남 농민 등록제를 조례안에 명시해야 함.
- 농민수당은 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민이라는 하나의 주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임.

③ 지정토론 (3인)

① 김희봉(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농업의 개도국 지위를 잃는다는 건, 우리 농촌에게 또 하나의 큰 위기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농민에게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다가오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취약계층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농민수당제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전정책이 필요하다.
- 충남의 농업, 농촌을 보존하고 농민수당 조례가 제대로 된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 파악과 더불어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도록 충남형 모델 개발에 박차를 기울여야 함.

② 김지숙(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 현재 실시중인 농업직불금제도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를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제도지만,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에 함께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직접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령 여성에 대한 농업의 존도가 심화되었음.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75%가 자가 농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 농민수당제 조례 수립에 있어서 설계라는 과정에 여성농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와 함께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조례가 필요하다.

③ 박지흥(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 충청남도에서는 농민 수당 조례안의 제정 시, 재정확보의 문제, 농민과 비농민 간 형평성의 문제, 시스템 도입 모델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 농민단체의 주장처럼 월 20만원 씩 개별로 농민수당 지급의 경우 연간 4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며, 도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음.
-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이 있어야만 농민수당제의 성패가 결정되며, 다양한 주체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진정성이 깃든 농민수당제 도입의 합의가 요망된다.

4 자유토론 및 질문

-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충청도와 의회가 농민수당을 재대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다.

[질문 : 유미경 정의당 충청도당 정책국장]

- 농민수당 연구모임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연구모임은 우리 충남의 농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함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우선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답변 :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 단순히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권리를 당당히 받아야 하는 권리주장을 했으면 함

[질문 : 예산덕산농협 박용한 감사]

- 지난 수십년간 농민은 희생만을 강요당한 것을 모두가 부인 할 수 없을 것임. 도의회와 행정의 다양한 기관들이 하나되어 농민수당제의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질문 : 예산군 농민]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의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농민들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음. 1개의 안을 만드는 작업은 단순히 의원 한명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충남의 민관이 하나되어 머리를 맞대야 함. 향후 적극적인 논의와 조례안 준비를 통해 최대 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농민수당제가 탄생되도록 할 것.

[답변 :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 다양한 지급방식으로 뜨겁게 논의 중이지만, 분명한 건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농민수당제에 대한 재정문제의 해결이 가장 큰 숙제이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 혜택이 중복적으로 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함.

[답변 : 정만영 부여군 농정기획팀장]

III 토론회 결론

<과 제>

1. 조례 제정 시, 농가단위 또는 농민 단위에 대한 재정 분석
2. 민관이 합의될 수 있는 농민수당제 모델
3. 도, 시·군의 재정 부담과 기존 사업의 통폐합 방향
4. 비농가, 도시 빈곤층 등과의 형평성 및 여론 설득

⇒ 도출된 과제가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성패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되는 대상 없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재정에 대한 고민을 도와 시군간 함께 풀어나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 시도를 선도할 수 있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정이 필요할 것임.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및 의견들이 도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고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사진



□ 언론보도

중도일보

2019년 07월 30일
05A면 (지역)

방한일 도의원 “농민수당 도입해야”

충남 농민수당제 정책 연구모임 토론회서 강조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사진)은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도내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을, 최용혁 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희봉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



예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토론에 앞서 “고용정

보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해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포=김홍수 기자

(11.5*12.8)cm

대전투데이

2019년 07월 30일
02면 (정치)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 위한 토론회

방한일 의원 ‘농민수당제’ 대한 뜨거운 논의 진행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이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도내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좌장을, 박경철 충남

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을 주제로, 최용혁 전농충남도 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김희봉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에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토론에 앞서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

소멸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하여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현장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원은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책임연구원은 기초발제를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례 제정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반영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14.9*13.2)cm

충청신문

2019년 07월 30일
04면 (종합)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밈그림'

도의회 연구모임, 구체적 조례 제정 방향 논의

충남형 농민수당 정책 도입을 위한 밈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29일 충남연구원, 농협, 충남도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초발제에서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조례에 기본소득

원칙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농민수당제 도입에 관한 각계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현장 농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방한일 의원은 충남이 지방소멸위험지수 0.67로, 위험 지역에 해당하고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막는 한편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농민수당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진웅 기자 jjw8531@dailycc.net

(11.2*9.9)cm

충청타임즈

2019년 07월 30일
12면 (지역)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논하다

도의회 토론회 개최... 방한일 의원·박경철 연구원 등 참여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이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도내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좌장을,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을 주제로, 최용혁 전 농충남도 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김희봉 당진시 김희봉 농

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토론에 앞서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현장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원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포 오세민기자

(11.2*11.6)cm

중양매일

2019년 07월 30일
15면 (종합)

방한일 의원, 충남형 농민수당 정책마련 토론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이 지난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도내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한일 의원(예산)이 좌장을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을 주제로 최용혁 전농충남도 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김희봉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토론에 앞서 "고용정보원 자

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하여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현장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원은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책임연구원은 기초발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례 제정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반영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천수 기자

(12.6*13.7)cm

신아일보

2019년 07월 30일
16면 (지역)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 정책마련 토론

서로 머리 맞대며 ‘농민수당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충남도의회가 29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 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섰다.

이날 방한일 의원(사진)이 대표를 맡은 농민 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방 의원은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 소멸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해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라면서, “현장 농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좌장을,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을 주제로, 최용혁 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이 만들어 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11.0*10.9)cm

5.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①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계획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를 위한 -
충남도의회 · 충남연구원 합동 연구모임 토론회

2019. 9.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를 위한 - 충남도의회 · 충남연구원 합동 연구모임 토론회

목 적

-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민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향후 조례 제정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자 함

I 개요

- 일 시 : 2019. 9. 10.(화) 10:00~12: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 ☎ 635-5360)
- 주 관 :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충남연구원 농민기본소득연구회(대표 : 박경철 박사)
- 주 제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
- 참석예정 : 50여 명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토론 참석자 >

좌장 및 발제 (1명)

- 방한일(충청남도의회 의원)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토론자 (5명)

- 김병혁(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 김지숙(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 이선영(충청남도의회 의원)
-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 박지홍(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 사회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자는 일정 및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II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			
10:00~10: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0:05~10:15	10'	인사말씀	방한일 의원
< 토 론 회 >			
10:15~10:35	20'	주제 발표	방한일 의원
10:35~11:25	50'	지정 토론	토론자 5명(각 10분)
11:25~11:55	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여자 전체
11:55~12:00	5'	폐회	방한일 의원

III 세부 진행계획

1 개회 : 10:00 ~ 10:05(5')

- 사회자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민의례(녹음 반주)

2 대표 인사말 등 : 10:05 ~ 10:15(10')

-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 참석내빈 명단 사전파악 제공
- 인사말씀(방한일 의원)

3 주제 발표 : 10:15 ~ 10:35(20')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방한일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4 지정 토론 : 10:35 ~ 11:25(50')

김 병 혁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김 지 속 (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이 선 영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광 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 지 흥 (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5 자유 토론 : 11:25 ~ 11:55(30')

-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간 자유토론
 - 자유로운 질의답변 진행
 - 질문자에게 마이크 제공

6 정리 및 폐회 : 11:55 ~ 12:00(5')

- 마무리 발언 후 폐회(좌장)
 - ※ 토론회 종료 후 오찬 예정

IV

협조 사항

○ **충무담당관실 기획홍보팀**

- 사진촬영 및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마이크 등 음향설비 지원

○ **충청남도(인사과)**

- 상시학습 시간인정(2시간)

○ **충청남도(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 도민, 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V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회원명단(15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용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이선영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회 원	추 욱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②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발제자료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초안)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도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농민에게 연간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시·군에 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소관 과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당해 주소지 관할 시장·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수급 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결정 통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그 외 지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제외)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3.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지급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이행)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마을별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공동실천 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결과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3차 토론회 개최 결과

- ❖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민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조례 제정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토론회 결과 임.
⇒ 논의 및 내용을 분석하고, 조례 제정에 반영되고자 함.

《 개 요 》

- 일시·장소 : 2019. 9. 10.(화), 10:00~12:00 /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 참 석 : 4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

I 총 평

- 현재 추진중인 농어민수당제 도입과 관련하여, 조례안 초안과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연구모임 마지막 토론회로
 - 회원들은 농어민수당제의 도입에 대해 전반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내면서도 지원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며,
 - 마지막 연구모임 토론회를 통해 농어민수당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시급히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 소요되는 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낮은 충남도의 자립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 향후 부서, 기관 등과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여 조례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II 주요 논의(요약)

1 인사말씀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

- 그동안 국내 농업정책은 개방화에 따른 시장 제일주의 정책으로, 농어업에 대한 단순 경쟁력만 강조 이러한 사회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어촌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진 것이 사실.
- 농어업 생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며, 지금보다 농어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야 함.
- 지난 주(2019.9.6) 도청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농어가 기본소득제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농어가 기본소득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한창 진행 중에 있음.
- 분명한 점은, 농어민수당제 도입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할 것이며,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충청남도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조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임.

2 주제발표

① 방한일(충남도의회 의원)

- 현재 시행중에 있는 농업환경개선실천 사업 등 충남도의 역점사업은 다른 지자체가 배우고 있는 선도적인 사례로, 농업도인 충남이 이번 농어가수당제의 도입을 통해 다시 한번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 농가단위로 지급인지, 농민단위로 지급인지에 대한 여전히 많은 논의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재정문제를 배제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 임.
- 과거부터 준비했던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농촌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에서 농민수당제의 당위성도 있다는 사실 임.

3 지정토론 (5인)

① 김병혁(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 조례안 초안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소득안정 보다는 농업이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저당한 보상체계에 대한 것으로 표현되었으면 함.
- 향후 농민수당의 금액을 인상할 시기가 왔을 때, 전체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조례안 수정 시,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과 농업이 담당하는 공익적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지급방법에서 연간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60만원을 최소기준으로 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하며. 차후 금액을 상향할때마다 조례안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정부의 직불금 개편 방향이 기본직불금과 부가형직불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계획 중이며, 농민수당 역시 농민수당과 농업환경실천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보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고, 농업환경실천 프로그램은 약간의 이행조건을 더하여 부가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함

② 김지숙(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 현재 추진중인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러 악조건 하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성농민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며, 여성이 농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여성농민의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온전하게 제정되어야 할 것임.
- 큰 범위에서 생각했을 때 정해진 예산 내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면,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이선영(충청남도의회 의원)

- 연구모임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정의당안은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으로, 연구모임은 주체를 농민으로 보고 내용을 정리했으며 정의당은 농민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음. 조례안에 담을 산업범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림.
- 농민수당은 개별 농민에게 연간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정의당안은 분기별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 지급하되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종사자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예외 없이 지급하며, 영농 및 영어 조합법인에 소속되어 수급요건을 갖춘 종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모임안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의당은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등으로 규정하였음.
-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의 오류로 농민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에 동참하면서 결과물을 가져오면 좋겠다.
-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진정 농어민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지급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 및 최종 가결되어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임.

④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 조례안이 탄생한 것은 분명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충남의 농민들에 대한 고민이 담긴 조례로써 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임. 단, 초안이 나왔다면, 조례제정운동본부와 갈등이 아닌, 상생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
-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재정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비전이 없이는 단순한 문서에 불과할 수도 있기에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비율의 편향성 문제가 없도록 위원회 위원의 성비문제도 조례안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임

⑤ 배연근(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 정부에서 농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하고 있고, 대농중심의 정책에서 소농중심의 정책으로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농민수당 조례의 제정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현재 농촌은 심각한 인구절벽과 고령화의 빠른 속도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는 위중한 상태임은 여기 계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내용이 충실하도록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함.
- 공감대와 소통이 형성되지 않은 정책은 죽은 것으로, 농민수당 조례 또한 모든 현장에서의 농민과 어민까지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지향해야할 방향이라고 생각 함.

4 자유토론

- 농민수당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고, 여성농민의 고충 등을 반영하는 등 조례안 초안을 좀 더 집행부와 논의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농민수당제 조례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실적인 도 재정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모두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보다 농어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작업을 끝까지 매진할 예정이다.

[의견 :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통장에 지급되면, 어떤 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사무소 등 농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통해 농민수당을 창구에서 홍보한다면, 농민이 지급받는 액수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사업의 효과도 증가할 것이다.

[의견 : 도민1]

- 현재 도에서도 중소농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 중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됨. 처음 시작 시 제대로 된 조례제정과 함께 다른 사업과의 재정문제를 같이 고려해야만 할 것임. 도내 시군과 함께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 중에 있음.

[의견 : 추욱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III 토론회 결론

<과 제>

1. 조례안의 최종 대상의 범위를 농민 또는 농어민으로 정하는 문제
2. 현재 진행 중인 농민수당제 주민발의 주체와의 협의 과정
3. 도와 시·군 간 재정 부담 비율 조정과 농업환경실천개선사업과의 공존
4. 향후 조례 발의 형식의 문제 - 집행부 발의 또는 의원 전체로 발의

⇒ 도출된 과제가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론>

-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성패의 조건은, 조례를 통한 사업의 대상자의 명확한 범위 설정과 함께, 다른 충청남도의 사업과의 공존 및 수당 지급에 있어 필요한 막대한 재정보화가 가능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집행부(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측되는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한 작업과 더불어, 최대 다수가 만족하고 비농민, 일반인까지 동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나가기야 할 것으로 보임.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및 의견들이 도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참고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사진



□ 언론보도

중앙매일

2019년 09월 11일
02면 (종합)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어민수당 도입 성공 수확 모색

농민수당제 도입 정책연구모임 농민·유관단체와 토론회



토론회 모습.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1)은 좌장과 발제자로, 이선영 의원(비례)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우리 사회는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을 농어업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에 지금보다 농어가소득이 증대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제 도입은 지역사회의 매우 큰 관심사항이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훌륭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 농업정책의 오류로 농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가 제대로 된 결과물로 도출·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천수기자

(23.5*11.0)cm

충청매일

2019년 09월 11일
09면 (지역)

충남도의회 정책연구모임, 농어민수당 도입 모색

도민·유관단체와 토론회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은 좌장과 발제자로, 이선영 의원(비례)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우리 사회는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을 농어업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에 지금보다 농어가소득이 증대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제 도입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훌륭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순우기자

(11.1*8.2)cm

충남형 농어민수당 도입 모색

충남도의회, 정책연구모임 농민·유관단체와 토론회
방한일·이선영 의원 “합리·실효적 조례” 한뜻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1)은 좌장과 발제자로, 이선영 의원(비례)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우리 사회는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을 농어업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에 지금보다 농어가소득이 증대

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제 도입은 지역사회의 매우 큰 관심사항이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훌륭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 농업정책의 오류로 농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가 제대로 된 결과물로 도출·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도의원 7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내포/이지웅 기자

(14.0*14.4)cm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어민수당제 도입 토론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및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예산1) 의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았으며 이선영(비례) 의원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우리 사회는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을 농어업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에 지금보다 농어가소득이 증대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octoday.co.kr

(17.1*4.7)cm

금강일보

2019년 09월 11일
04면 (정치)

“농어민수당 도입은 시대적 과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예산1)이 좌장과 발제자로 나섰고,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여

전히 크기 때문에 농어가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농어민수당제 도입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합리적인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 농업정책의 오류로 농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라며 “실효성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제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도의원 7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13.4×8.8)cm

서울일보

2019년 09월 11일
13면 (지역)

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도입 성공 모색

농민수당제 도입 농민-유관단체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1)은 좌장과 발제자로, 이선영 의원(비례)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우리 사회는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을 농어업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에 지금보다 농어가소득이 증대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제 도입은 지역사회

의 매우 큰 관심사항이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훌륭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 농업정책의 오류로 농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가 제대로 된 결과물로 도출·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도의원 7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임진서기자

(17.5×6.8)cm

Ⅲ. 충청남도 농민수당제 도입 연구

1. 배경 및 목적
2. 개념 및 정책 동향
3. 농민수당 도입 쟁점 및 충남도 도입 방향
4. 결론 및 과제

1.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1980년대만 하더라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보다 높았지만 1990년대 들어 농산물수입이 본격화되면서 농가경제는 점점 하락해 현재는 생존이 어려울 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음
 - 농가인구는 1980년에 1082만 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31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화율도 같은 기간에 6.7%에서 44.7%로 대폭 상승해 농촌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림1> 농가인구 및 고령농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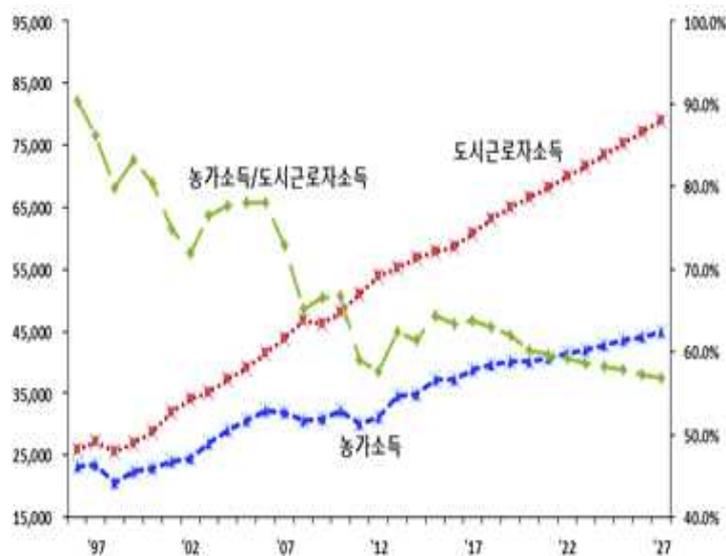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이수행 외(2019)

-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1993년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이 타결되면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함. 이후 WTO 무역협상과 FTA 추진으로 전 세계 주요 농업선진국과 농업대국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게 됨
 - 우리나라는 UR 협상 이후 2004년 한·칠레FTA 체결을 시작으로 2008년 한·미 FTA 체결, 2015년 한·중FTA 체결을 통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WTO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포기 선언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음

○ 정부의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UR 농산물협상 타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가구에 비해 농가소득은 90%를 상회했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가소득은 빠르게 하락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에 따르면, 2000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80.5% 였으나 2017년에는 63.5%까지 하락했으며 2027년에는 5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도농 간 소득격차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농업전망

- 그동안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많은 농정정책은 사실상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고착화해 농가 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킴

- 정부가 WTO 농산물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농업직불금 제도는 그 금액 자체도 적을뿐만 아니라 직불금의 대부분이 소수 규모화, 기업농에게 돌아가 농가 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쌀농업직불금의 경우 상위 농가의 12%가 전체 직불금의 거의 절반을 가져감
- 또한 정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사실상 중대 농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는 대다수 영세소농들은 농정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음
- 이처럼 불평등한 농업구조가 지속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의 지속성은 현재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농업 도인 충청도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0년 농가인구는 394,324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276,426명으로 29.4%가 감소함. 같은 기간 농업인 고령화(65세 이상) 비율은 2010년 22.1%에서 2018년 49.8%로 27.8% 증가함
- 농촌 내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촌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농촌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예를 들어 충남의 농촌노인 자살률은 전국 수위를 자리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개방농정 하에서 추진되어 온 경쟁력 강화 농정에서 과감히 탈피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처럼 농민이면 누구나 기본생존권이 보장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 전남 해남군이 2018년 12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 하지만 농민수당의 개념, 지급대상, 범위, 액수 등에 대한 논쟁과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충청도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필요

- 현재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농(어)민수당 도입이 확대되고 충청도에서도 2020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바른 방향 제시가 필요

- 충남도의회는 2019년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을 구성해 4차례의 토론회와 1차례의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올바른 도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개념 및 정책 동향

1. 개념 정의

1) 농민수당의 개념

-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활동으로 인해 생산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을 말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에 명기되어 있음
 -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명기하고 있음

참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관련 법규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

-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3)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5) 생태계의 보전 (6)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 (1) 안정적 식량 공급
- (2) 토양·물·공기·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 (3) 농촌경관 유지
-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자료: 충남도의회(2019).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

-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학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최대 166조 원까지로 평가됨
- 양승룡(2011)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86조 원, 임업은 75조 원, 어업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농촌진흥청(2012)의 농업·농촌의 가치 연구에 따르면, 산업적 가치 86조 원, 공익적 가치 166조 원으로 평가됨

[표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연구·평가 결과

연구자	평가대상	평가결과
오세익 외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10조 673억원 - 식량안보 1조 7,084억원 - 경관기능 1조 1,214억원 - 농촌활력 8,165억원 - 환경보전 6조 4,210억원
양승룡 외 (2011)	농업의 다원적 가치	총 86조 2,907억원 - 환경보전 79조 6,178억원 - 문화경관 3조 6,357억원 - 농촌활력 9,822억원 - 식량안보 2조 550억원 * 임업 75조 6,913억원, 어업 3조 7,130억원
농진청(2012)	농업·농촌의 가치	총 252조원 - 산업적 가치: 86조원 - 공익적 가치: 166조원 - 환경보전: 146조 5천억원 - 경관·문화: 16조원 - 농촌활력: 9,800억원 - 식량안보: 2조원
공기서 외(201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4조 3,715억원
김용렬 외 (2014)	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9조 3,272억원 - 식량안보 2조 3,090억원 - 환경보전 2조 207억원 - 지역사회경제 1조 6,317억원 - 문화경관 1조 9,598억원 - 국격제고 1조 4,080억원

자료 : 전북연구원(201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원 프로그램 연구, 재정리, 박경철(2019) 재인용

2)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급격한 시장개방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음
 - 특히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인해 값싼 농산물의 수입으로 현재 농민은 생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그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함
-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basic income)의 6가지 원칙을 준용하고 있음
 - 6가지 원칙: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 충분성
 -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
 - 원래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기본소득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
 - 농민기본소득은 학술적으로 일종의 참여소득,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3)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공통 개념

- 모든 농민에게 영농규모,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지원금
 -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 반면, 농민기본소득의 농민의 기본생존권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나 두 개념의 공동 개념은 위와 같음
 - 두 개념의 공통점은 지급 방식에서 기본소득의 6개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임. 하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2. 지자체 도입 및 논의 현황

1) 광역 자치단체 도입 및 논의 현황

- 광주광역시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진행
 - 농민단체, 시의회, 시청 간 협의 중에 있음

○ 강원도

- 도지사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실시 방법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당초 고령의 영세 소농에 한정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농민 전체로 확대함

○ 경기도

- 2020년 6개 시군, 2021년 15개 시군, 2022년 31개 전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실시를 계획함
-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개념에 맞게 개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충청북도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완료 후 조례 제정 청원
- 충북도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는 반대함

○ 충청남도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완료 후 조례 제정 청원
- 충남도는 기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고 농민수당 도입을 준비 중임

○ 전남도

-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연 60만 원 지급할 예정임
- 농민단체에서는 농가와 어가를 분리해 실시하고 가구가 아닌 개별 농민, 어민 단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입법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도의회, 행정부 간 충돌을 겪음

○ 전북도

- 2020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으로 연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임. 단, 축산 전업농은 제외함.
- 도의회 입법 처리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행정부 간 충돌을 겪음

○ 경남도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진행
- 경남도 내부적으로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 중이나 아직 공론화는 되지 않음

○ 제주도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진행

2) 기초 자치단체 도입 현황

○ 강진군

- 2018년부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3ha 미만 농가에 70만 원 균등 지급
- 2018년에는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각각 절반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는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해남군

-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2018.12)
- 2019년 상반기 각각 3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 고창군

- 2019년 9월 전북도 최초 농민수당 하반기 분 28만5천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 부여군

- 2019년 12월 충청남도 최초 농민수당 14만 원을 지급할 예정임

○ 화순군

- 농가당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의 농민수당 가운데 2019년 3/4분기 농민수당 30만 원 지급함

○ 함평군

- 농어가당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의 농민수당 가운데 2019년 하반기인 3/4, 4/4분기 농어가수당 각각 30만 원 지급함

○ 봉화군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형식으로 농가당 5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

○ 청송군

- 경북도 최초로 2020년 1월 농가당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 기타 지역

- 여주시, 순천, 영암, 장흥, 익산, 정읍, 의령, 영천, 함안 등 전국 80여 기초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에 있음

3. 중앙정부 정책 동향: 공익형 직불제 도입

1) 목적

○ 농업직불제의 양극화 문제 완화

- 기존 직불제는 경지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농가 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킴
- 기존 직부제의 양극화로 인해 영세소농가의 몰락을 초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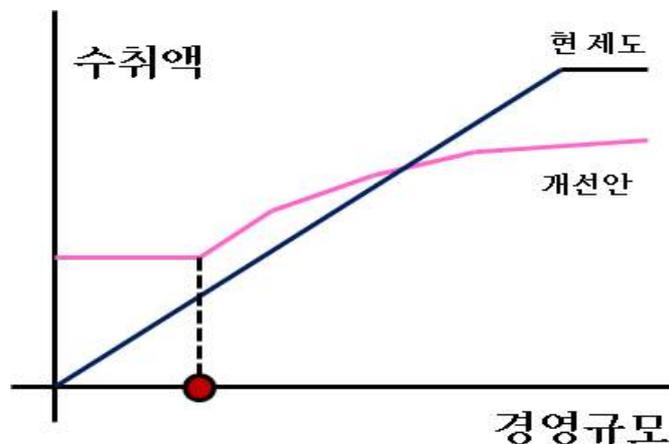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 기존 직불제체계로는 다양하게 요구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 존재
- 직불제가 단순히 농가소득 보전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익적 가치 증진 유도 필요

2) 개선 방향

○ 하후상박(下厚上薄)식의 기본형 직불제 실시

- 영세 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기초직불을 지불하고 그 이상에 농가에게 는 점증적으로 지불
- 현재 영세 규모 농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변동직불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음. 또한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 규모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음
- 만약 변동직불제가 폐지된다면 쌀 시장안정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재 농민단체에서는 변동직불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음



<그림 3> 기본형 직불제 개편 방향

자료: 박경철(2019),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발표 자료

○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가산형 직불제 실시

-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직불금을 가산형 직부제 하나로 통합함
- 가산형 직불제의 경우 공익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준수 사항 이행이 필요함
- 이외 정부에서는 청년의 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농 직불을 도입함



<그림 4>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

자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2차 토론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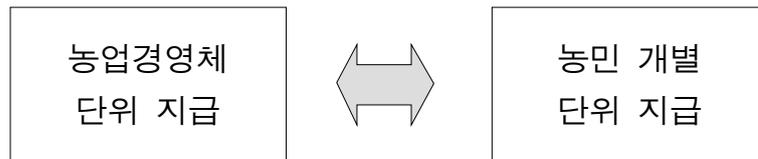
Ⅲ. 농민수당 도입 쟁점 및 충남도 도입 방향

1. 농민수당 도입 쟁점

1) 지급 방식: 농가 또는 개별 농민

- 현재 지자체 농(어)민수당은 대부분 농가단위 지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제약, 농업통계 체계의 미흡, 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이유로 농민수당을 농가단위로 지급하거나 할 예정임
 - 이 때문에 현재의 농민수당은 농가 내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이 소외되고 있어 농민단체 특히 여성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
- 일부 지자체는 개별 농민단위 지급을 준비 중에 있음

- 경기도는 2020년부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원칙에 맞게 개별 단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 기본소득은 6가지 원칙 가운데 특히 개별성을 특히 강조하기 때문에 농민수당도 향후 개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경기도 이외 충남 부여군은 2021년부터 개별 지급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전남도도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급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그림 5> 농민수당 도입 쟁점1: 지급 방식

○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 파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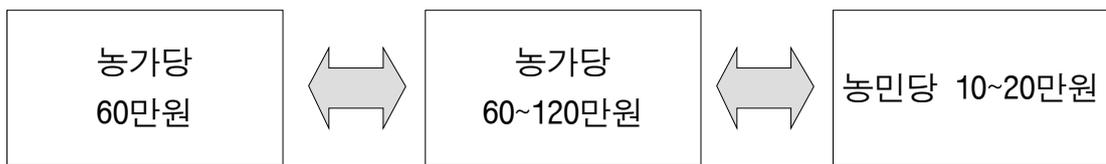
- 현재 지자체에 따라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 앞서 설명을 했지만 두 용어 간에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농민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각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정책을 도입할 경우 농민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여건에서 어려울 경우 농가 단위 지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향후 개별 농민 단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임

2) 지급 액수

○ 농민수당은 농가당 연간 60~120만 원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음

- 강진군은 2018년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농가당 연간 7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남군은 2019년 처음으로 농민수당 명목으로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함
- 해남군이 농민수당 명목으로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간 약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임

- 하지만 전남 함평군과 화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당 연간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농민단체 및 진보정당에서는 개별 농민당 매월 10~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농민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민당 매월 10~20만 원의 농민수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금액은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액수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농민단체 및 진보정당 또한 이러한 금액은 이상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의 가치와 목적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액수를 제시함



<그림 6> 농민수당 도입 쟁점2: 지급 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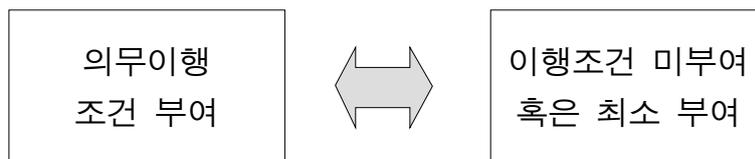
○ 도와 시·군 간 농민수당 지급액 합의 필요

- 현재 농민수당 도입은 논의는 기초 지자체를 넘어 광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전남을 비롯해 전북, 충남, 강원, 경기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 현재 광역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액은 경기도를 제외¹⁾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어)가당 60만 원으로 결정된 상태임. 이 때문에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농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에는 농민수당 금액을 일률적으로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함

3) 의무이행 조건

1)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내 6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별 농민에게 연간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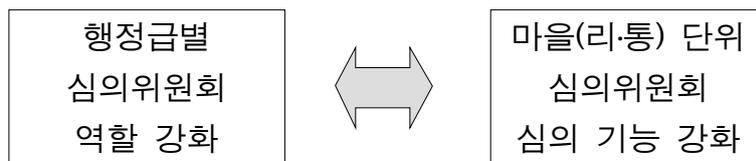
-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무이행 조건 부과 필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9항에 명시하고 있음
 - 즉,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이 해당됨
 - 따라서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역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 조건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농민수당은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의 기본생존권 보장 차원의 지급인만큼 의무이행 조건은 최소한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기본소득의 원칙 중의 하나인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만약 농민수당의 조건을 두더라도 최소한의 조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농민수당에 조건을 강하게 둔다면 이러한 정책은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농업환경 관련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조건은 가급적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을 두더라도 최소한의 조건만 부여해야 할 것임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과 농민의 기본생존권 보장이 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 조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하지만 의무이행 조건을 강제할 경우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이러한 이행조건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일부 지자체 농민수당 관련 조례에서는 의무이행 조건의 제시보다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명시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농민수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주민들의 올바른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서임



<그림 7> 농민수당 도입 쟁점3: 의무이행 조건

4)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 농민수당의 올바른 집행과 심의를 위해서 각급 행정단위에 심의(또는 추진)위원회 설치 필요
 - 심의위원회는 행정급별로 도 단위-시·군 단위-읍·면·동 단위-리·통 단위 설치가 필요함
 - 심의위원회에는 행정조직, 농업인단체 및 기관 외에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
 - 도 단위 위원회는 도내 농민수당 정책의 총괄 관리 및 평가 기능 수행
 - 시·군 단위 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민수당 실행 및 평가 기능 수행
 - 읍·면·동 및 리·통 위원회는 농민수당 대상자 선별 및 확인 기능 수행. 특히 리·통 위원회는 농민수당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을 내 농민수당 대상자를 명확히 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그림 8> 농민수당 도입 쟁점4: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2. 충남도 도입 방향

1) 지급 방식

- 충남도 농민수당 도입 시 지급 방식 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개별 농민 단위 지급
 - 2순위: 농업경영체 내 농업인에 대한 할증방식 지급. 이후 개별 지급으로 전환
 - 3순위: 농업경영체(농가) 단위 지급
- 2018년 기준 충남도 농업경영체 전체 187,312개에 달함
 - 이 가운데 천안시가 17,464개로 전체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산시가 13,783개로 8.9%, 당진시가 16,541개로 8.8%를 차지함

[표 2]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단위 : 개

시군	2018		시군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천안시	17,464	9.3%	금산군	10,239	5.5%
공주시	14,467	7.7%	부여군	13,985	7.5%
보령시	12,430	6.6%	서천군	9,241	4.9%
아산시	13,783	7.4%	청양군	8,291	4.4%
서산시	16,746	8.9%	홍성군	13,419	7.2%
논산시	15,395	8.2%	예산군	13,511	7.2%
계룡시	1,071	0.6%	태안군	10,729	5.7%
당진시	16,541	8.8%	총 계	187,312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 2018년 기준 충청남도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을 보면, 1인 경영체가 98,924개로 전체 52.8%를 차지함
 - 다음으로 2인 경영체는 82,592개로 44.1%를 차지함. 1인, 2인 경영체가 전체의 96.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나머지 3인 경영체는 2.8%, 4인 경영체는 0.3%로 매우 적음

[표 3] 전국 및 충청남도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2018년)

전국 농업경영체			충남 농업경영체		
농업종사자 수	농업경영체 수	비율	농업종사자 수	농업경영체 수	비율
1인	924,990	55.8%	1인	98,924	52.8%
2인	687,919	41.5%	2인	82,592	44.1%
3인	40,972	2.5%	3인	5,170	2.8%
4인	4,531	0.3%	4인	599	0.3%
5인 이상	215	0.0%	5인 이상	27	0.0%
전체	1,658,627			187,31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지급 액수

○ 충남도 농민수당 도입 모델에 따른 지급 액수 단위는 다음과 같음

- 모델1: 개별 농민당 50~60만 원, 이후 점차 확대
- 모델2: 농업경영체 내 1인인 경우 50~60만 원, 2인인 경우 80~90만 원, 3인인 경우 100~120만 원 지급. 이후 액수 점차 확대 내지 개별 지급으로 전환
- 모델3: 농업경영체(농가)당 50~60만 원 지급. 이후 점차 확대

○ 충남도 농민수당 도입 모델에 따른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음

- 모델1: 1) 개별 농민당 50원 지급 시 ⇒ 141,076백만 원
 2) 개별 농민당 60원 지급 시 ⇒ 169,291백만 원
- 모델2: 1) 농업경영체 내 1인인 경우 50만 원, 2인인 경우 80만 원, 3인인 경우 100만 원 지급 시
 ⇒ 121,332백만 원
 2) 농업경영체 내 1인인 경우 60만 원, 2인인 경우 90만 원, 3인인 경우 120만 원 지급 시
 ⇒ 140,642백만 원
- 모델3: 1) 농업경영체(농가)당 50만 원 지급 시 ⇒ 93,656백만 원
 2) 농업경영체(농가)당 60만 원 지급 시 ⇒ 112,387백만 원

[표 4] 충남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급 모델에 따른 지급액(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모델1: 농업인 개별 지급		모델2: 할증방식		모델3: 농업경영체 지급	
	50만원	60만원	1인 (50만원 기준)	2인 (60만원 기준)	50만원	60만원
충남 전체	141,076	169,291	121,332	140,642	93,656	112,387
천안시	12,348	14,817	10,844	12,632	8,732	10,478
공주시	11,081	13,297	9,474	10,971	7,234	8,680
보령시	9,428	11,314	8,093	9,374	6,215	7,458
아산시	9,352	11,222	8,334	9,738	6,892	8,270

서산시	12,790	15,347	10,950	12,681	8,373	10,048
논산시	11,618	13,941	9,988	11,573	7,698	9,237
계룡시	742	890	657	766	536	643
당진시	12,528	15,034	10,751	12,460	8,271	9,925
금산군	7,839	9,407	6,701	7,760	5,120	6,143
부여군	10,940	13,128	9,302	10,747	6,993	8,391
서천군	7,086	8,503	6,068	7,015	4,621	5,545
청양군	6,366	7,639	5,434	6,295	4,146	4,975
홍성군	10,400	12,480	8,856	10,248	6,710	8,051
예산군	10,264	12,316	8,803	10,196	6,756	8,107
태안군	8,298	9,957	7,077	8,187	5,365	6,437

자료: 충청남도의회(2019).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

3) 의무이행 조건

○ 의무이행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 실천을 장려하도록 규정함

- 예를 들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활동 참여를 장려하도록 규정함
- 그 외 지역 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추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심의(추진)위원회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농민수당 심의(혹은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
- 농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마을단위 심의위원회의 심의 역할 중요. 이를 위해 시·군 차원의 농민수당 조례에서는 마을(리·통) 단위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 부여군 사례-부여군 조례안 제14조(지급결정 절차): 마을이장은 실경작 사실 확인 및 의무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마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만약 마을 단위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기존 마을운영위원회(이장, 부녀회장, 청년 혹은 노인회장 등 약 5인)가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IV. 결론 및 과제

1. 결론

- 첫째, 농민수당은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
- 둘째, 현재 기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 지급 액수, 지급 방식 등에서는 차이를 보임
 - 전남 강진과 해남을 시작으로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광역 자치단체로는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확정했거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로 연간 60~120만 원이 도입되고 있으나 농민단체 등에서는 개별 농민단위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 셋째, 충남도는 2019년 도의회를 중심으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 목적, 지급 대상, 지급 액수, 지급 방식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함
 -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에서는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조례 운동을 전개해 도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충남도도 2019년 9월 3농정책위원회에서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후 <충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감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충남도 농민수당은 액수가 낮더라도 농민 개별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액수를 높여나가도록 함
 - 예산의 한계와 실시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별적으로 지급해 여성농민, 청년농민 등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 과제

○ 첫째, 농민수당 예산 확보 전략 필요

- 충남도, 충남도의회, 농민단체 간 합의를 통해 농민수당을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둘째, 개별 농민 지급을 위한 로드맵 제시 필요

- 만약 충남도개 개별 농민 단위 농민수당이 아닌 농가 단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향후 어떻게 개별 농민 단위로 지급할 것인지 로드맵 제시 필요

○ 셋째, 은퇴농,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등 소외 농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오랜 동안 농사를 짓다가 현재 은퇴해 마을 거주하고 있는 은퇴 고령농,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못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마지막으로, 비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방안 필요

-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으로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민수당에 대한 비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유도 필요

참고 문헌

- 가이 스탠딩, 안효상 옮김. 2019.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창비.
-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 박경철. 2015. 충남도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박경철·한승석. 2019. 도농균형 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이수행 외. 2019. 유럽의 농업직불금 사례외 시사점. GRI 정책브리프 2019-01.
- 정기석. 2018.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삶창.
- 충남도의회. 2019.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